

2009 통일백서

2009 통일백서

U N I F I C A T I O N W H I T E P A P E R

2 0 0 9
통일백서

발간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탈냉전기(脫冷戰期)를 지나 '변화무쌍' 한 전환기의 여정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공유하는 한반도, 남과 북의 관계 역시 가변적인 환경과 유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호작용과 영향을 주고받는 탓에, 그 명확한 해법과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국제체제'라는 일반적인 구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한반도의 복잡다단한 갈등은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와 한반도의 양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 간에 노정되었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 제안 등이 미래전략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돌이켜 보건데, 남과 북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경직된 사고에 묶여서 큰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세우고 '유연'하게 행동하며,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감을 상실한 이상주의도,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도 모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통일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의 방향은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로이 만든 국가적 목표와 변화하는 국제정세, 그리고 통일을 향한 국민여망을 담아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남북공영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비핵·개방·3000'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창출과 경제공동체라는 '큰 열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계획을 세심하게 꾸려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을 제안한 우리의 진정성과는 달리, 한반도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원칙과 기본'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초하에 대북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차단하고 전략무기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남북대화'와 '상설대화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생필품·의료적 지원, 물적·인적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대화와 인도주의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갈라진 남북이 사이 좋게 통일의 열차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국민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한반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론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올바른 정책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8년은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광복 63주년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이하였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하였습니다.

'상생과 공영'의 기틀을 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꿈과 「통일 한반도 시대의 전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이제, '강한 나라',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대에도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이 살아있고 유연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2009년 통일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백서에는 상생·공영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소중한 흔적들이 담겨있습니다. 통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한줌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통일부 장관 **현 인택**

발간사 / 2

제1장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제1절 정책 추진환경 / 16

제2절 정책 수립과정 / 19

제3절 비전 · 원칙 · 추진과제 / 21

1. 비 전 / 21
2. 원 칙 / 22
3. 추진과제 / 23

제4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노력 / 27

1.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 27
2.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 35
3. 「비핵 · 개방 · 3000」 이행준비 / 40

제2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제1절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 · 제도 확충 / 46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46

2. 「남북협력기금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 48

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추진 / 50

제2절 대북정책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 52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 · 운영 / 54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54
2.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 57

제4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60

1. 대북 민간경협 지원 / 60
2. 협의사무소 인원 철수 / 63
3.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 64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절 남북교역 및 투자 / 70

1. 남북교역 / 70
2. 남북 민간경제협력사업 / 77

제2절 남북간 운송체제 / 78

1. 남북 화물열차 운행 / 78
2. 해상운송 / 79
3. 항공운송 / 81

제3절 개성공단사업 / 82

1. 개성공단 통행 상황관리 / 82
2. 입주기업과 생산현황 / 83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 89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 91
5. 기업 투자환경 / 94
6.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 101

제4절 남북관광협력 / 104

1. 금강산 관광 / 104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 105
3. 개성관광 / 105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 107

1. 남북공동행사 / 107
2. 문화·예술 교류 / 108
3. 역사·학술 교류 / 109
4. 체육 교류 / 111
5. 종교 교류 / 113
6. 지방자치단체 교류 / 114

제6절 기타 남북교류협력 / 116

1.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 / 116
2. 농업 협력 / 117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 125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 129

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 130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 131

제3절 인도적 지원 / 135

1. 민간차원의 지원 / 136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141
3.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 145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146

1. 사회적응교육 / 147
2. 정착지원 / 149

제5절 북한인권 문제 / 158

제5장 남북대화

제1절 군사분야 회담 / 169

1.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69
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70

제2절 경제분야 회담 / 172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72
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74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 / 176

제3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 178

제6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제1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 184

제2절 통일정책 홍보 / 189

제3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 192

제4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 196

제5절 통일교육 / 200

1. 통일교육 기본방향 / 200
2. 초청교육 / 202
3. 사이버 통일교육 / 209
4. 통일교육 자원 / 214
5.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22

부록

2008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 228

2008년 남북관계 주요 통계 / 236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제 1 장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제1절 정책 추진환경

제2절 정책 수립과정

제3절 비전·원칙·추진과제

제4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노력

제 1 장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는 지난날 남북관계에서 있었던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국민들의 비판과 남남갈등이 있었고,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도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실용의 잣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상호존중하면서 진정성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7천만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살고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

해 한반도에 비핵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인도적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 출범 한달만인 2008년 3월 북한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남북관계는 조정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강경대결정책이라고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 「비핵·개방·3000」 폐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2월 1일에는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왜곡 비난과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1절 정책 추진환경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포괄적인 통일정책 구상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의 통일노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국제냉전의 종식이라는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정책의 계속성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국제 환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용주의는 모든 정책은 당면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현실적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대북정책에도 반영하였다. 즉,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생산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였다.

둘째, 정부는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비판받은 점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보다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는 일정부분 진전을 이루었다. 남북간 인적왕래가 확대되었으며, 남북간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경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도 제기되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질적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군사우선의 호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대남 의식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는 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제사회 변화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이념적 대립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반영하여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교류협력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심화를 이루어 나가고, 남북이 서로 상생하는 쌍방향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셋째, 정부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다. 북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불안요인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북·일북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국제환경 속에서 남북관계를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제2절 정책 추진과정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2008.2.25)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남북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상생과 공영의 메시지를 직접 국민과 북한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동안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의지를 밝혔다. 이후 7월 11일 제18대 국회개원연설에서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선언의 시대에서 실천의 시대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통일한국의 꿈을 제시하며 남과 북이 함께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9월 22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최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상생과 공영'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북한에게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2008.2.25, 취임사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제 우리는 진정성과 호혜성을 가지고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을 씁니다.

– 2008.6.6, 현충일 추념사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남북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 2008.7.11, 국회개원연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 2008.8.15, 광복절 경축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2008.9.22,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최사

제3절 비전 · 원칙 · 추진과제

1. 비전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 또한 한계가 있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의 길로 나선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남북간 상생과 호혜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일방적 지원 방식의 경험에서 탈피하여 쌍방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상호 결합하게 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한 「행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단의 아픔인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한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2. 원칙

상생공영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추진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실용과 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② 비용대비 성과가 있는가, ③ 북한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④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가, ⑤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둘째, 원칙에는 철저히되,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며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정세의 변화 과정에서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국민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문제는 국민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국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원칙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우리의 대북정

책을 지지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다.

3. 추진과제

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정부는 남북간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그리고 인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가슴을 열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며, 새롭고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제도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 남북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대화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함께 발전되도록 상호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물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에서 포괄적인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이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면 현재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추진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협력, 농수산협력, 자원개발협력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경협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대규모 경협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우리의 재정부담능력, 국민 합의라는 네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오랜 분단의 시간은 남과 북 사이에 이질감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접촉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나아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협의체를 통해 이를 보다 정례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교류 방식에 있어서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마. 인도적 문제 해결

정부는 반세기 넘게 분단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일회적인 상봉행사를 넘어 금강산 면회소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고향방문, 상봉의 전면적 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남북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핵문제 등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우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있어 성

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식량지원,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구호 지원과 함께 농업 등 분야에서의 지원도 추진해 나갈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북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것이다.

상생공영정책의 체계

개 념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구상
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공동체 구현 ○ 경제공동체 형성 ○ 행복공동체 실현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과 생산성 ○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 국민적 합의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성있는 남북대화 ○ 한반도 평화정착 ○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 인도적 문제 해결

제4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노력

1.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가. 북한의 강경조치와 우리의 대응

2008년 한해 동안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말부터 북한은 대남 비난과 함께 연이은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는 조정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은 3월 27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의 우리측 당국자를 철수 시키고, 3월 29일에는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접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정부는 북핵 폐기와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대화 추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4월 17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를 북한에 제의하였다. 4월 29일에는 통일부장관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간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들을 현실과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남북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5월 12일과 6월 30일에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옥수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제의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하면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7월 11일 비극적인 금강산 피격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같은 날 제18대 국회개원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확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북한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7월 13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8월 3일에는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당사자가 같은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유관부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우리측 인원을 추방하고 동해지구 MDL 통과를 제한하며,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8월 3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이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은 8월 9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및 이산가족면회소 등 당국 관계자를 추방한다고 통보함으로써 남북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통일한국의 꿈”을 제시하며,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였다. 9월 22일에는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를 통해 “상생공영을 위한 전면적인 대화”를 거듭해서 제의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 10월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일부 민간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대북 전단살포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전단살포가 계속될 경우 우리 인원·물자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금강산지구 남한 체류 인원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가 남북한이 상호 비방 증상을 하지 않기로했던 그 동안의 남북간 합의정신에 맞지 않으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해당 민간단체에 대한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는 전단살포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10월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 중대결단” 등의 위협을 하고, 11월 12일에는 우리측의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비난하면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판문점 경유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2일 북한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단장 명의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11월 2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간 육로통행과 경제협력사업을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이며, 북한이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에 나와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11월 27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대화 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신에 따라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번 조치에 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경제협력협 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단, 남북화물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상주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12월 1일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측의 남북 당국간 협의 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2월 5일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2월 6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 제의에 앞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였다.

2008년 북한의 대남 비난 및 강경조치 주요 내용

- 3.27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자 철수
- 3.29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
- 4. 1 우리 대통령 직접 거명·비난 및 「비핵·개방·3000」을 반통일 선언이라고 비난
- 4.26 상설대화기구 제안에 대해 거부
- 7. 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
- 8. 3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현지조사를 거부하면서 △금강산지구 내의 불필요한 우리측 인원 추방, △인원·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을 발표
- 8. 9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 1단계 추방조치로 한국관광공사 및 이산가족면회소 등 당국 관계자 추방 통보
- 9.25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 10. 2 남북군사실무회담, 대북전단 살포 계속시, △개성공단·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 △MDL을 통한 남측 인원 통행 제한, △개성·금강산 체류 불가 위협
- 10.16 노동신문 논평원 명의, “남북관계의 전면차단” 가능성 위협
- 11.12 장성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 “12.1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차단” 통보, 북한적십자 중앙위 성명, 판문점 연락대표부 폐쇄 및 판문점 경유 남북직통전화 통로 단절 통보
- 11.24 장성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 12.1부터 중대조치 실시 통보
- 12. 1 △문산-봉동간 열차운행 중지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지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체류 및 방북인원 제한조치 실시

2008년 우리측의 주요조치와 제의내용

- 3.27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철수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
- 4.17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지와외 회견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안
- 6. 6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쓰자고 강조
- 7.11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제의
- 7.11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감표명과 함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 7.13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 통일부 차관은 북한에게 정부합동조사단 수용을 촉구
- 8.15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촉구
- 9.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를 통해 그간 모든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간 전면적 대화 제의
- 10. 2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11.12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하여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당국간 대화 제의
- 12. 1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는 남북간 출입·체류합의서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과 11.27 통일부 장관의 당국간 대화제의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

나.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정부는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제협사업을 계속 지원하였다. 그 결과 당국간 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양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8년도 남북왕래인원은 총 18만 6,000여 명으로 이전 해보다 17.3% 증가하였고, 남북교역액은 약 18억 달러로 1.2% 증가하였다. 개성공단 내의 생산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동기업수가 93개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고, 북한 근로자수도 39,000여 명으로 72%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이 12월 1일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탁아소 건설, 소각장 증설 등 필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다. 인도적 문제 해결

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제의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약 165억원) 및 WHO와 UNICEF 등 국제기구(약 1,604만 달러)를 통한 북한 농촌 개발·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인도적 사업을 지원했다. 제7차 UN인권이사회(2008.3)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피해 위로금과 귀환자의 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남북자 피해보상지원에 힘썼다.

라.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정부는 국민 합의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언론인, 남북관계 전문가, 학자, 국내 NGO 등 여론 주도층과의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상생공영포럼」을 창설(2008.11)하여 사회각계 여론 주도층과의 쌍방향 정책대화를 추진하고, 「순회홍보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설명을 실시하였다. 통일부 간부 및 직원들도 학교, 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일일통일교사를 실시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기관 및 통일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등을 통일교육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통일교육의 균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가. 북핵 문제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차 북핵 문제가 발생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듬해인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남북한 및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

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후, 2005년 9월 19일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이하 2.13합의)와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이하 10.3합의)를 도출하였다.

10.3합의에서 북한은 2007년 12월 말까지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시한을 넘겨 2008년 6월 26일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였고, 6월 27일 6자회담 참가국 방송사를 영변으로 초청한 가운데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미국은 6월 26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검증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7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6자는 6자회담 틀 내에서 검증체제를 수립하고, 감시 체제는 6자회담 수석대표들로 구성한다는 등의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참가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신고·불능화의 마무리 및 3단계 핵폐기 단계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2008년 12월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검증의정서 채택문제,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제공 이행문제, 동북아 평화·안보 지도원칙(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회

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검증의정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2.13합의 및 10.3합의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핵 신고·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5자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계하여 20만톤 상당의 중유 및 설비·자재 형태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2008년 들어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관련 회의는 총 6회 개최되었다. 이 중 4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고, 2회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차원의 한·중·북 3자협의 및 남북 대표단 접촉에서는 우리의 대북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지원을 위한 품목·수량 등 기술적 협의와 함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에너지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문제 등 6자회담 과정의 진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접촉 및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등 의무이행에 상응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협의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2.13합의 및 10.3합의 이행 차원에서 초기 단계 중유 5만톤 지원 및 그다음 단계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를 제공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유 및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지원을 위하여 남북협력 기금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회의 명칭	일시·장소	주요 협의 내용
제3차 한·북·중 3자협의 1단계회의	2008.2.21~22, 북경	한·중이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제공문제 논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접촉	2008.3.27~28, 판문점	우리측 제공 설비·자재관련 기술협의
제3차 한·북·중 3자협의 2단계회의	2008.4.10, 북경	대북 설비·자재 공급방안 협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접촉	2008.6.5, 판문점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남북간 협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2008.6.11, 판문점	비핵화와 연계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일정 등 논의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남북 대표단 접촉	2008.9.19, 판문점	비핵화 2단계 이행 관련 논의

우리 나라의 대북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제공 현황

구분(합의일)	제공일	내용	중유환산 규모
초기단계 중유 지원	2007.7.1~2007.8.22	중유 50,000톤	50,000톤
1차분 (2007.11.13)	2007.12.16	철강류 5,017톤	9,237톤
1,2차 국제입찰분 (2007.11.13, 2007.12.26)	2008.8.5~2008.9.17	철강류 6,490톤	17,902톤
2차분 (2007.12.26)	2008.2.22~2008.6.25	철강류 18,463톤	39,834톤
3차분 (2008.4.10)	2008.5.29~2008.8.13	철강류 3,731톤	28,024톤
총계		중유 5만톤, 철강류 33,701톤	144,997톤 (2008년 12월 현재)

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노력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토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실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추진」의 세부 과제로 통일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① 비무장지대의 가치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인식 전환 유도, ②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한다는 두 가지 실천방향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군사·안보적 측면,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통일부 주관으로 2008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계획 수립 및 남북회담 의제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합의를 통해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정부는 「비핵·개방·3000」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에게 핵포기 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구상으로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공존공영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구상은 북한이 주장하듯이 북핵 폐기 조건론이나 대북강경정책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엄연한 현실로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구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원래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2007년 말까지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신고·불능화가 완료되면,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구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즉, 북핵 폐기의 진전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협조를 통하여 경제·교육·인프라·재정·생활향상 등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비핵·개방·3000」의 본격적인 가동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개방·3000」의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

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남북경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 협력하에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기반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 제1절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제도 확충
- 제2절 대북정책추진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 제4절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

제2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정부는 남북관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변화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북 투자와 남북간 왕래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비 등을 통하여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적 관리 역량을 확충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유관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1절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제도 확충

2008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절차 간소화 및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교류협력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개선하여 확대·발전된 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정(1990.8.1)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변화된 남북간 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7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중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 정부는 법안 폐기에도 불구하고 동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08년 5월부터 이미 제출하였던 법안을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008.5.8~27), 추가 입법예고(2008.7.31~8.19), 규제개혁위원회(2008.8.25~9.1) 및 법제처(2008.9.11~10.20) 심사 등을 거쳐 2008년 10월 30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 발전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 방북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승인한 방문기간 내 재방북시 방북승인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의무도 일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협력사업 절차 중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남북간 교역대상을 S/W,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밖에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벌칙 및 과태료 대상을 조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목적	주요 내용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방문절차 : 일부 남북간 직접왕래자의 방문승인 면제 ○ 북한주민접촉신고 : 접촉신고 면제근거 마련 등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등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상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폐지 ○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행정조사권 신설 ○ 벌칙·과태료 대상 조정

2. 「남북협력기금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의견수렴(2008.5.23~6.13) 및 입법예고(2008.6.24~7.14)를 실시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8년 10월 10일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어 2008년 12월 2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금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선정단계에서 객관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간단체의 기금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정부재량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손실보조제도'의 명칭을 제도의 취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 변경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목적	주요 내용
시행령	기금지원의 객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용도 세분화 - △이산가족교류에 필요한 경비, △인도적 목적의 북한주민 구호, 개발지원, △북한 비핵화 소요 비용,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사용의 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환수 요건 규정 -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지원, △해당 목적외 용도로 기금 사용, △법령 규정 위반시 기금 환수 가능 ○ 불복절차 규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비핵화 계정' 설치 근거 마련 ○ '손실보조'를 '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 명칭변경

구분	개정 목적	주요 내용
시행규칙	기금지원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범위 확대 - 주민왕래지원, 문화·학술지원 등의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을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남북교역·경협보험 가입절차 합리화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보험계약 한도 등을 결정하면, 사안별 계약체결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병행하여 기금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18)을 개정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2008.12.31)을 개정하여, 복잡·다양한 기금지원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기금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관리심의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연장기간 축소, 보험계약 변경사항 세분화 등 교역·경협보험의 처리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교역·경협보험 처리지침」(2008.12.31)을 개정하였다.

기금 관련 하위규정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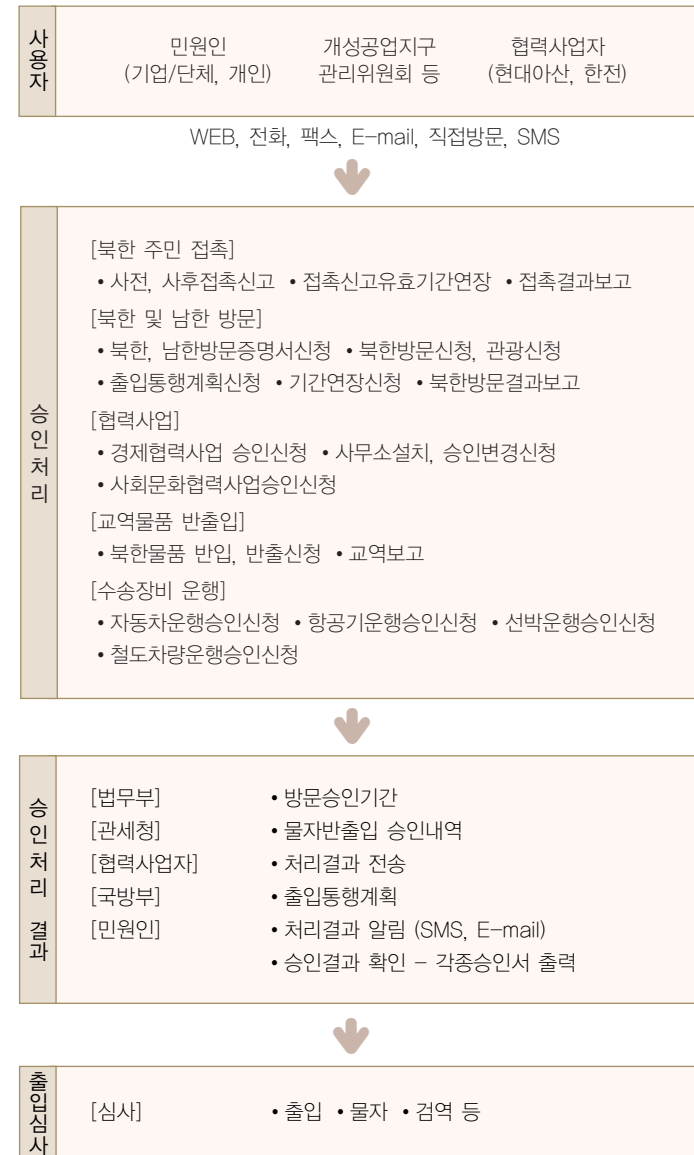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 - 1단체 연 1회 지원 원칙,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기준 명시 ○ 남북협력기금사용결과보고 제도화

구분	주요 내용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008.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체 연 1회 지원 원칙,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기준 명시 ○ 예외 취급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의무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200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지원절차, 기금 집행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합, 공통 규정 마련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명문화 ○ 교역·경협보험 관련 제도 운영방식 변경 ○ 민족공동체회복지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경협·교역보험취급기준 (200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처리절차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연장기간 축소(10년→5년), 보험계약 변경사항 세분화 및 처리절차 간소화 ○ 교역·경협보험 용어 변경

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추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적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북한주민접촉신고, 북한방문증명서신청,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 협력사업승인신청, 교역물품반출입승인신청 등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승인·처리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부터 가동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남북 교역량, 방북자, 통행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시스템 연계 확대를 통해 방북자들의 방북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차량 출·도착 보고서를 생략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교류협력시스템 업무 흐름도



또한 2008년에는 2단계 개선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의 자체 시스템을 연계하여 윈스톱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자가 출입통행 신청시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온라인 출입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중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방북교육 이수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시스템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연계하였다. 이 밖에 차량심사 단축을 위한 RFID시스템 설치(동해선), 방북증 개선사업 등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제2절 대북정책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정부는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2006년 1월 27일 설치되었으며, 통일

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4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민간위원 9명중 7명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대상의 간담회를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상생공영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2년 임기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기 민간위원 9명이 위촉(2008.12.27)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총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8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49개 안건을 심의하여, 46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5월에는 부처간 실무적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12월에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 범위를 확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여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008.12.31 기준)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공자기금 예수금	운용수익 등	계
남북협력 계정	4조 3,964억원	24억원	1,130억원	4,536억원	4조 9,654억원
경수로계정	-	-	4조 3,718억원	327억원	4조 4,045억원
합 계	4조 3,964억원	24억원	4조 4,848억원	4,863억원	9조 3,699억원

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체회의 4회, 실무협의회 7회를 개최하여 해외 탈북자 보호방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개선방안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적응교육, 취업, 사회복지, 지역사회 정착 등 정부업무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된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의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이 조성된 이래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4조 3,964억원, 민간출연금 24억원, 공자기금예수금 4조 4,848억원, 운용수익금 4,487억원, 기타 수입금 375억원 등 총 9조 3,699억원이 조성되었다.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조정 등으로 인해 총 133개의 사업에 2,312억원이 집행되었다.

인적왕래와 관련하여 북한현지 체험학습 등 3건에 대한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2008년 겨울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32억원, 개성 만월대 등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 4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8건 38억원이 지원되었다.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건설사업 180억원, 이산가족 영상편지교환사업 1억원 등 4건 182억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34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52억원 등 71건 587억원이 집행되었다.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지원 438억원 등 총 18건 1,101억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교역·경협자금 대출,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등 유상지원의 경우 29개 사업에 총 366억원이 집행되었다. 교역·경협자금 대출은 총 22건 108억원(교역자금대출 17건 78억원, 경협자금대출 5건 30억원)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98억원 등 총 7건 258억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괄호안은 기금사업 건수

구분	자금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경 상 사 업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인적양래 지원		277	253	23,686	1,142	1,056	3,786	5,289	1,698	2,721	39,907	
			(1)	(1)	(9)	(3)	(7)	(13)	(12)	(17)	(3)	(62)		
	사회문화 협력지원		980	637	102		654	3,098	7,468	7,375	6,908	3,847	31,069	
			(3)	(1)	(1)		(2)	(10)	(18)	(20)	(18)	(8)	(70)	
	인도적 사업	이산가족 교류지원	986	2,830	1,299	2,029	2,996	3,158	13,289	9,908	26,918	18,241	81,653	
			(3)	(5)	(5)	(6)	(6)	(5)	(7)	(6)	(9)	(4)	(37)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260,827	97,737	97,615	122,585	150,134	122,547	186,621	212,536	227,193	59,694	1,537,475	
			(13)	(9)	(25)	(30)	(36)	(46)	(52)	(60)	(96)	(70)	(338)	
	남북 경제 협력	경제분야 협력 기반조성	4,882	14,578	89,850	36,789	76,318	76,033	204,475	152,091	172,540	110,074	937,629	
		교역경험 보험		1,268									-	1,268
				(1)										(-)
	기타	사회문화 분야협력 기반조성		1,416				62					1,478	
			(2)				(1)					(3)		
경상지원 합계		268,943	117,474	189,118	185,088	231,243	205,954	415,639	387,199	435,256	194,578	2,630,479		
		(21)	(19)	(33)	(50)	(53)	(78)	(108)	(121)	(167)	(103)	(567)		
영 자 사 업	인도적사업 (옹자)		86,740	18,955	96,743	156,088	101,982	179,262	3,939	140,479		-	784,199	
			(1)	(1)	(1)	(2)	(1)	(2)	(1)	(1)	(1)	(-)	(6)	
	교역경험 사업 자금대출		500	46,072	36,157	18,710	37,377	29,311	47,910	56,631	10,807		283,475	
			(1)	(10)	(8)	(31)	(76)	(51)	(50)	(43)	(22)		(256)	
	남북 경제 협력 (옹자)	교역 자금 대출		500	1,072	390	7,933	13,677	8,259	7,327	8,288	7,834	55,280	
			(1)	(9)	(5)	(29)	(64)	(37)	(27)	(21)	(17)	(210)		
경험 사업 자금 대출				45,000	35,767	10,777	23,700	21,052	40,583	48,343	2,973	228,195		
				(1)	(3)	(2)	(12)	(14)	(23)	(22)	(5)	(46)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괄호안은 기금사업 건수

구분	자금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민족 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67,523			30,582	35,965	43,974	27,520	23,065	83,369	25,820	337,817
		(1)			(1)	(2)	(3)	(5)	(3)	(5)	(7)	(11)
옹자지원 합계		67,523	87,240	65,027	163,482	210,763	183,333	236,093	74,914	280,479	36,627	1,405,491
		(1)	(21)	(44)	(60)	(35)	(80)	(58)	(54)	(49)	(29)	(273)
대북 경수로 사업			325,936	300,284	300,883	328,745	86,984	22,678	8,883		-	1,374,393
			(1)	(1)	(1)	(1)	(1)	(1)	(1)		(-)	(1)
총 계		336,465	530,650	554,428	649,454	770,751	476,273	674,409	470,995	715,734	231,205	5,410,364
		(22)	(22)	(45)	(61)	(89)	(159)	(167)	(176)	(216)	(132)	(841)

2.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집행 심의·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정비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기금집행 심의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과정을 2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였다.

기금심의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종전의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정부 부처간의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토의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사전 협의기구로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

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및 해당 안전 관련 부처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개편(2008.5.15)하여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구성된 통일부내 자체 심의기구인 ‘기금관리심의회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기금관리심사반’을 설치하여 기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2008.10.10) 및 시행규칙(2008.12.2)을 개정하여 기금지원 용도를 세분화하고 민간단체의 부적절한 기금집행에 대한 기금환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범위를 확대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18) 등의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민간단체의 기금유용과 단가조작 등을 막기 위해 조달구매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5월말 예비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1월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발간·배포(2008.11)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기금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

으며, 기금지원 결정 및 사용내역을 통일부(www.unikorea.go.kr)와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실적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원칙 수립
기금지원 심의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참여 확대 (4인 → 5인) ○ 사전 심의기구 신설 - 「기금관리심사반」(한국수출입은행)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관련부처 국장급) 신설 ○ 기금지원 심의절차 강화 (2단계 → 4단계) ※ 「기금관리심사반」(수출입은행)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금 지원·집행 원칙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지원관련 법규정 개정 정비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2008.10) 및 시행규칙(2008.12),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2008.12) -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 등 ○ 기금지원 민간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2008.6)
대국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승인·집행실적의 통일부·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2008.4) ○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배포(2008.11)
민간단체 기금 사용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민간단체 대상 통일부 감사 실시 (2008.11~12월)

제4절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5.7.12)에 의거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연락, 지원, 자문, 기타 편의 보장과 남북사이의 교역·투자 관련자료 제공 등을 통해 대북투자를 확대하고 남북간 경제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협의사무소)를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개소하였다.

2008년 2월 29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는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이하 협의사무소)로 개칭되었다. (「통일부 직제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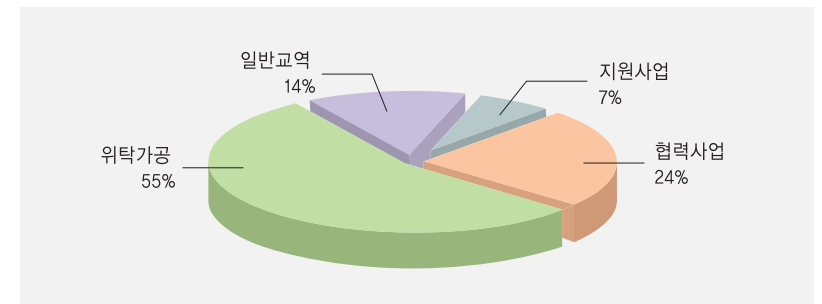
1. 대북 민간경험 지원

남과 북은 협의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그동안 중국 단둥에서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되던 「의류위탁가공상담회」를 2006년부터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기업간 사업협회가 개성 협의사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교역과 IT·전기·전자분야의 사업 등도 대부분 개성 협의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협의,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지 남북기업간에는 총 1,284회의 사업협회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남한에서는 4,108명, 북한에서는 3,686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남북간 사업협의 및 참석인원 현황

연도별	사업형태별 협의건수(건)					참석인원(명)		
	위탁가공	협력사업	일반교역	지원사업	계	남한	북한	계
2005	13	16	9	5	43	160	111	271
2006	222	131	69	24	446	1,396	1,149	2,545
2007	316	94	64	36	510	1,540	1,386	2,926
2008	156	64	46	19	285	1,012	1,040	2,052
합 계	707	305	188	84	1,284	4,108	3,686	7,792

2005~2008년 사업형태별 구성비



또한 남한기업의 대북사업 제안, 북한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가공 제품의 작업진도 파악 및 제품선적 확인 등 다양한 문건 중개기능을 수행하여 북한 현지 공장방문이 어려운 남한기업들의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지 남과 북은 총 2만 2,203건(남: 1만 1,059건, 북: 1만 1,144건)의 문건을 교환하였다.

2006년 5월 4일 남북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종래 남한기업이 중국을 경유하여 전달하던 견본을 개성을 통

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간 위탁가공 교역과정에서 수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견본을 육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송달은 물론 송달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지 남과 북은 총 1,393건(남: 577건, 북: 816건)의 견본을 교환하였다.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장면(협의사무소)

나아가 협의사무소에서 남북기업 실무자간 활발한 기술협의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8년 3월 27일 당국인원 철수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개성 협의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민간기관 파견자 등이 대북 민간 경협사업 지원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에도 남북 기업간 사업협의 285건, 문건중개 1만 1,630건, 견본송달 686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대북 민간경협사업 지원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기업들이 중국 단둥 등 제3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의사무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도별 대북 민간경협 지원실적

연도별	사업협의	문건중개	견본송달
2005년	43	27	1
2006년	446	3,221	222
2007년	510	7,325	484
2008년	285	11,630	686
합 계	1,284	22,203	1,393

2. 협의사무소 인원 철수

북한은 2008년 3월말부터 우리측 당국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남비난을 개시하였다. 3월 24일에는 협의사무소 직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우리측 협의사무소 근무인원 중 민간기관 파견자 4명(한국수출입은행 1명, 한국무역협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한국무역진흥공사 1명) 등을 제외한 당국인원 11명에 대해 3일 이내 철수할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 입장을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주장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체류합의서」 위

반임을 지적하면서 철회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의 문서요구를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측 당국인원의 철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2008년 3월 27일 당국인원 11명이 철수하였으며,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협의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8년 11월 24일 우리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우리측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부정하고 대결정책을 추구” 한다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협의사무소를 폐쇄한다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측은 2008년 11월 28일 청사 주요시설을 봉인조치하고 컴퓨터 등 주요물품과 문서를 국내로 반출하였으며, 시설관리인원 2명을 제외한 민간기관 파견인원은 모두 철수하였다.

3.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당국인원 철수 및 협의사무소 기능 정지에 따라 대북 경협사업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북 경협사업자의 애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의류임가공, 농수산물, 지하자원, IT·전기전자, 경공업 등) 간담회를 28회 개최하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도시를 순회하면서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남북 민간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북 경협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지방순회 대북 경협설명회 장면

2008년도 협의사무소 주요업무 추진 현황

일 자	주 요 행 사 명
4,23	○ 의류분야 위탁가공 교역설명회 개최(서울)
6,5~6,20	○ 2008년도 추동북 의류위탁가공 상담회 개최(개성)
9,24/ 10,15/ 11,4	○ 지방도시 순회 대북경협 설명회 개최(부산, 광주, 대구)
10,28	○ 협의사무소 창립 3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 개최(서울)
11,11~11,19	○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업무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4월 ~ 12월	○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절 남북교역 및 투자

제2절 남북간 운송체계

제3절 개성공단사업

제4절 남북관광협력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제6절 기타 남북교류협력

제3장

남북교류협력

2008년에는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당국간 교류협력이 답보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남북 교역액은 18억 2,037만 달러로 2007년도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남북간 왕래인원 역시 전년도 대비 17.3% 증가한 18만 6,775명을 기록하였다.

민간교류협력의 안정적인 추진은 남북관계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육로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환율상승 등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민간교류협력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제1절 남북교역 및 투자

1. 남북교역

가. 개요

2008년 남북교역 규모는 환율상승·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일반 교역이 감소하고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및 위탁가공교역 등 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2007년 대비 1.2% 증가한 18억 2,03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상업적 거래의 평균증가율이 48%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2008.12.1)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역이 위축되었다. 교역규모를 반입·반출로 구분하여 보면, 반입은 9억 3,225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1.8% 증가했고, 반출은 8억 8,812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4.0%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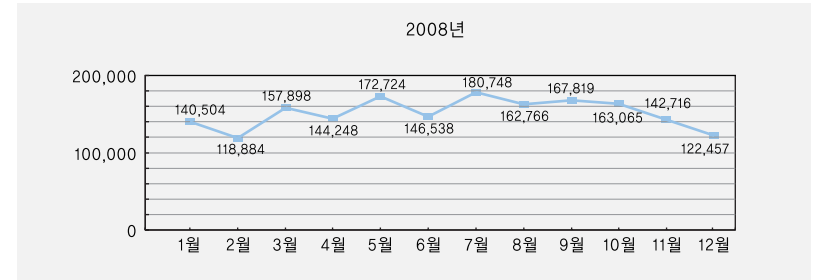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5,170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5,845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797	1,820	1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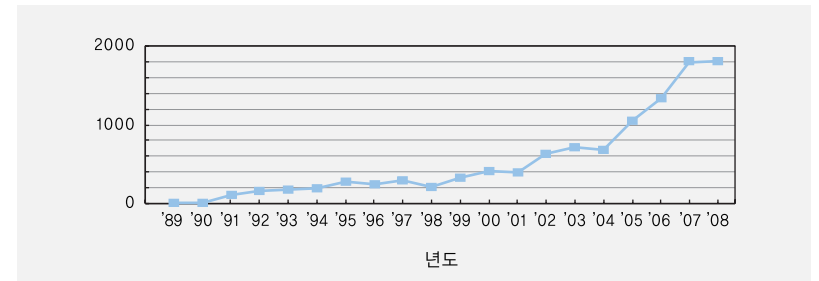
2008년도 월별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 달러)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나. 유형별 교역현황

2008년도 상업적 거래는 17억 1,187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9.6%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에서 94%를 차지해 남북교역이 상거래 위주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반입은 9억 3,219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1.8% 증가하였고, 반출도 7억 7,967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7.1%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 및 생산물 반입의 증가,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8억 844만 달러로 2007년 대비 83.5% 증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전기제품(21%)과 기계류(21.1%)의 반출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4억 83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3.8% 증가하였는데 이 중 섬유류의 위탁가공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깐마늘 등 농림수산물, TV·라디오카세트 등 전자·전기제품과 휴대용라이터 등 생활용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일반교역은 3억 9,943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3.4% 감소하였고, 경공업협력과 금강산관광 등 기타 경제협력 관련 교역은 9,568만 달러로 2007년 대비 51.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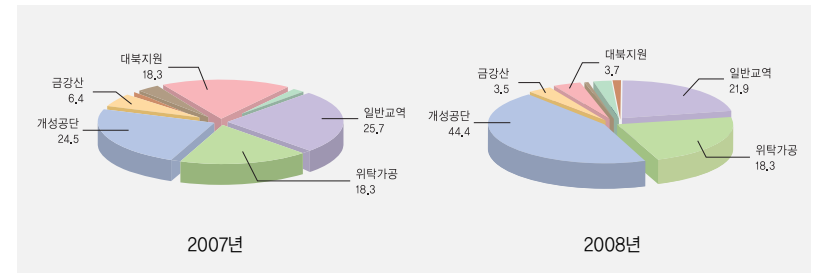
비상업적 거래는 1억 85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70.4%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6%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 관련 교역은 125만 달러로 2007년 대비 33.8% 증가하였으나, 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은 6,706만 달러로 2007년 대비 79.6% 감소하였다.

2008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합 계
	개성공단	위탁가공	일반교역	금강산관광	경제협력	경공업협력	대북지원	6자회담에너지지원	사회문화협력	
교역액 (천달러)	808,445	408,307	399,431	63,713	19,912	12,060	67,060	40,194	1,247	1,820,369
구성비 (%)	44.4	22.4	21.9	3.5	1.1	0.7	3.7	2.2	0.1	100

2007~2008년 거래 유형별 구성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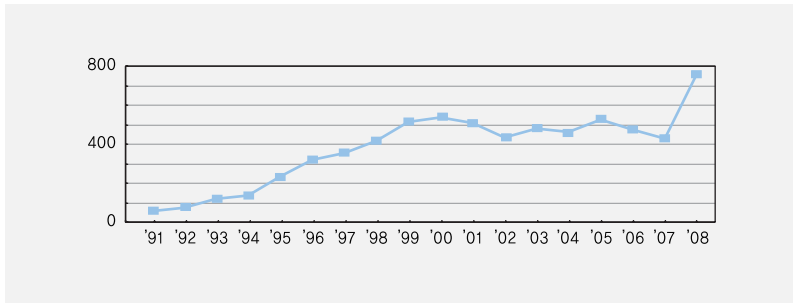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 교역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은 물품을 단순 반출입하는 일반교역에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제품을 재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하고, 이후 기계·설비 등을 투자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08년 남북교역은 일반교역 비중이 21.9%로 2007년 대비 3.8% 감소하고,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22.4%로 2007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특히 위탁가공교역 중에서도 신사복·여성정장 등 임가공 단가가 높은 품목이 증가하는 등 남북교역 구조가 단순 상품거래에서 위탁가공 교역으로 점차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간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1991년에는 56개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36개사, 2008년에는 760개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개성공단 관련업체(2007년 42개에서 2008년 193개)의 증가로 교역업체수가 전년 대비 80%나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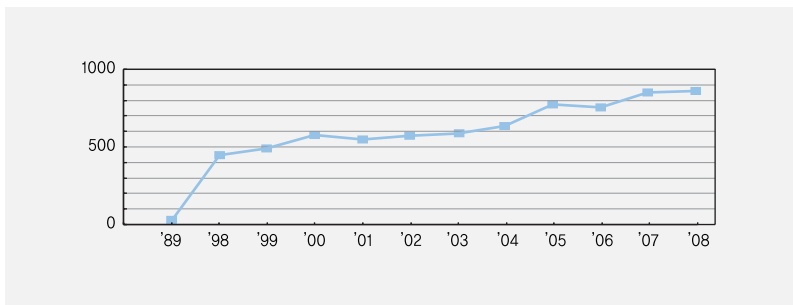
(단위 : 업체수)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78개, 2007년 853개, 2008년 859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체 품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순이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단위 :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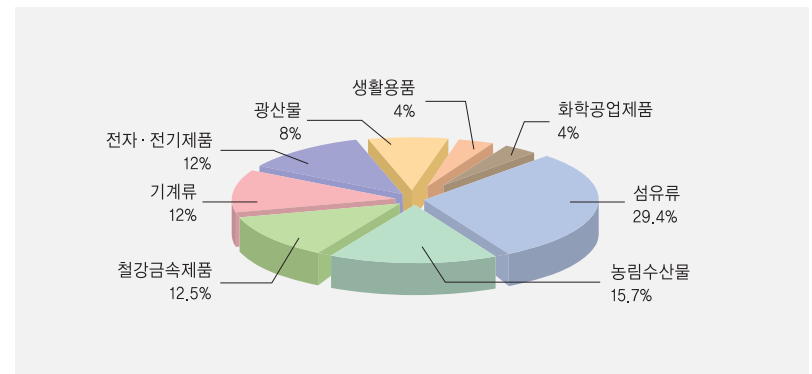


섬유제품은 2008년도 반출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29.4%(5억 3,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생산 및 위탁가공의 수주가 증가하고, 양복·코트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의 생산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전자·전기제품류(2억 2,000만 달러)는 TV·라디오·전선 및 소프트웨어의 위탁가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수산물(2억 9,000만 달러)과 광산물(1억 5,000만 달러) 반입은 고환율로 인한 수송비 및 반입물품 단가 상승 등으로 2007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품목별 교역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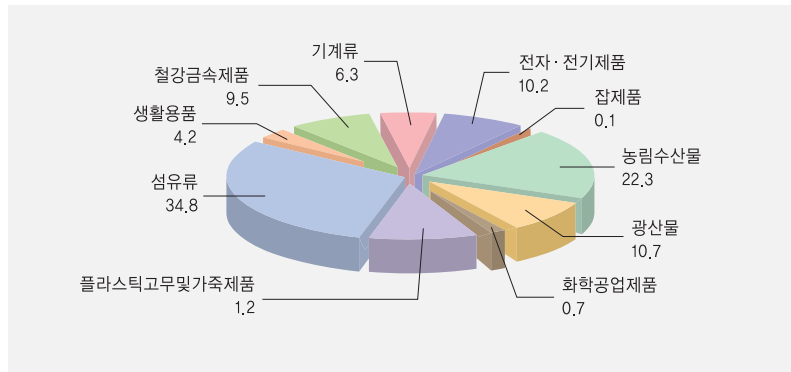
(단위 : %)



교역품목을 반입·반출 품목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2008년 반입품목의 비중은 섬유류(34.8%), 농림수산물(22.3%), 광산물(10.7%), 전자·전기제품(10.2%)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2008년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산 농림수산물과 무연탄 등 광산물도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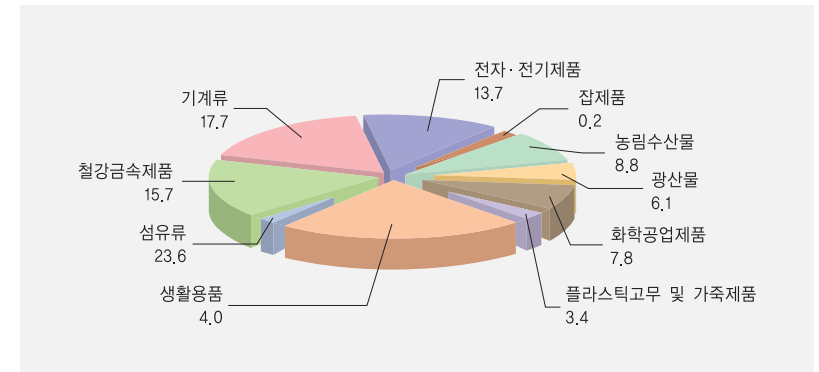
전체교역 반입 품목별 구성비

(단위 : %)



전체교역 반출 품목별 구성비

(단위 : %)



2008년 반출품목은 식물 등 섬유류(23.6%), 건설 중장비 등 기계류(17.7%), 철강금속제품(15.7%), 전자·전기제품(13.7%)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본격화와 함께 섬유류(원부자재)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개성공단 등 투자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건설자재 및 기계설비 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남북 민간경제협력사업

남북간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 제외)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총 61건이 승인되어, 54건의 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취소되었다. 2008년에 신규로 사업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총 9건에 5,317만 달러로 2007년 5건, 1,785만달러에 비해 증가되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개성공단 인근지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분야도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신규 협력사업 승인 현황

업체명	승인 일자	사업 내용	승인액(만달러)
(주)아천	1.14	종합물류사업	570
(주)바두바투	2.4	주유소 운영	182.4
(주)독여로	2.25	참깨재배 및 참기름 가공	25
(주)파라다이스코리아	6.12	섬유제품 생산	1,270
(주)대동수산	6.20	수산물 가공	500
(주)아천	7.10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1,530
(주)남북경협	10.9	스포츠 의류 생산	500
(주)나우코퍼레이션	10.30	골판지 박스 생산	500
(주)G-한신	11.24	라면 공장	240
9개 업체			5,317.4

제2절 남북간 운송체계

1. 남북 화물열차 운행

2005년 12월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를 통해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

리회담 합의를 통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간에 남북 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화물열차는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정기적으로, 오전 9시에 우리측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하여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되었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하여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이 있는 화차만, 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였다.

그러나, 남북 화물열차는 북한의 12월 1일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총 222회(왕복 444회)를 운행하였으며, 화물 운송량은 총 17회 31량 55TEU를 기록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이며,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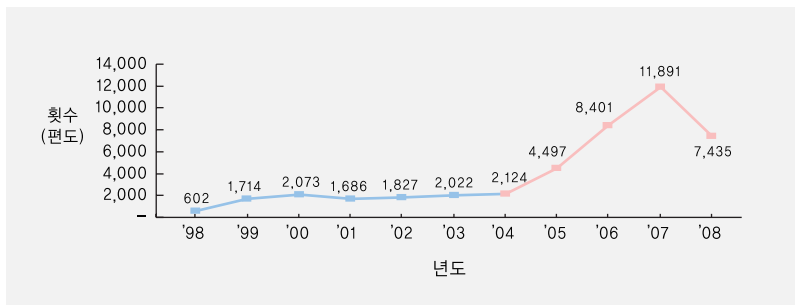
2. 해상운송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항과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과 북의 국적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8.15를 계기로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남: 통일부, 북: 육해운성)은 전화 1회선과 FAX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설치하여, 1일 2회(오전, 오후)씩 정기적으로 통화하면서, 쌍방간 선박운항 허가, 각종 사고시 긴급통보 및 선박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남북한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7,435회로 전년 대비 37.5% 감소하였다. 우리측 선박은 해주모래의 반입 감소, 수산물 반입 및 대북지원물자 반출 감소로 전년 대비 38.5% 감소한 7,181회를 운항하였다. 북한 선박은 주로 무연탄 수송선박 및 2007년 5월부터 운항이 시작된 부산에서 나진간 북한 정기화물선 운항 증가로 2007년 대비 21.5% 증가한 254회를 운항하였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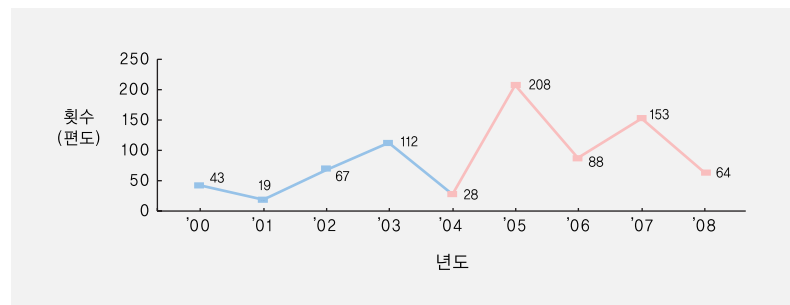
남북해운합의서 발효(2005.8) 이후 2008년 12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해역을 총 947회 운항하였으며, 이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514회, 우리측 해역(제주해협)을 통과해서 북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예: 서해 남포 ↔ 동해 청진)은 433회이다.

한편, 2008년 8월에는 북한 장전항 해상에서 우리 모래운반선(동이1호)과 북한 어선이 충돌하여 북한 어선 1척이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실종되는 해상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남북해운합의서 등에서 합의한데 따라 사고 사실을 상호 통보하고 손해배상 등 관련 사후 처리문제를 쌍방 합의 하에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3.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서해를 우회하는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2008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고 민간 교류행사가 감소함에 따라 편도 기준 남북간 항공기 운항도 총 64회로 전년 대비 71.9%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적기의 이용 비율은 전년도의 35.3%(153회 중 53회)에서 43.8%(64회 중 28회)로 다소 상승하였다.

남북간 항공운항 현황



제3절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 통행 상황관리

개성공단사업은 2008년 3월 29일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중단한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2008.12.1)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은 「12.1 조치」를 통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면서 상시 체류인원 수를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횟수(1일 6회)와 일일 출입인원 및 차량(매 회당 인원 250명, 차량 150대)을 대폭 제한하였다. 동 조치 이전에는 매일 08:30부터 17:00까지 일일 18회의 출입경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기업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원부자재 및 상품 수송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도록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12월 26일에는 입주기업의 비상위험 상황을 담보하기 위해 경협보험 지급 총한도액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 주요내용

- 원부자재·생산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의 우선 통행 보장
 - 매일 첫 출경(09:00) 및 첫 입경시(15:00) 승용차 이용 금지
 - 서울 ~ 도라산 ~ 개성공단간 정기 셔틀버스 운행
- 출입경이 많은 월·금·토요일에는 입주기업과 건설업체를 구분하여 출입 시간대 설정, 출입경 인원 분산
 - 입주기업 : 월 09:00, 10:00 출경, 금 17:00, 토 15:00 입경
 - 건설업체 : 월 11:00 출경, 토 16:00 입경

2. 입주기업과 생산현황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간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를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수되고 2007년 12월말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사업 추진일지

일자	추진 내용
2000. 8.22	현대-北아태간 총 6,612만㎡ 개발합의서 체결
2002.11.20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27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2003.4-2006.11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2003. 6.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사업 추진일지

일자	추진 내용
2003. 8.20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2004. 1.29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 '05.8.1 발효)
2004. 4.23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2004. 6.14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2004.10. 5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2004.10.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 8. 1	토공, 본단지 1차 16만 9천㎡ 분양 공고
2005.12. 5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2005.12.28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6. 6.29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2006.10.31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가동
2006.11.21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2007. 5.26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2007. 1.30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2007. 4.30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2007. 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9.30	총생산액 2억달러 달성
2007.12.3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2008. 7. 4	북한 근로자 3만명 고용
2008.11.30	총생산액 5억달러 달성
2008.12. 1	북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
2008.12.13	통일전담대 개성공단 제품 전용 상설전시관 개관
2008.12.23	제1차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완공

2008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시범단지 27개 기업과 본단지에 입주한 66개 기업 등 9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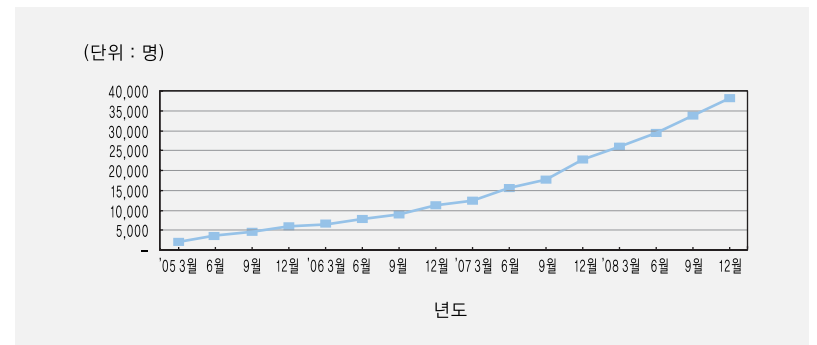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류

업종 \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 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목재
계	93	56	4	22	8	2	1
시범단지	27	(주)삼덕스타필드 (주)신원예벤에셀 문창기업(주)개성	(주)태성하타 (주)지에스	(주)로만손 개성공장 (주)로잔 개성공장 (주)현진 개성공장 (주)엔·아트 동일정공(주) 대선테크(주) (주)픽시스 (주)에버존 아라모드시계(주) 개성공장 (주)개성대화 소노코쿠진웨어(주) 개성신영(주) (주)조민P&P (주)대건산업 개성한생(주) (주)호산에이스 (주)티에스피	개성부천공업(주) 솔루텍지에스(주) (주)제씨콤 개성공장 (주)개성마이크로 GS용민전자(주)		
본단지 1차	14	성화개성(주) (주)좋은사람들 개성1공장 (주)진글라이더 개성코튼클럽(주) (주)명안 개성공장 (주)개성제일상품 (주)명화제화 (주)만선개성 (주)개성아트랑 (주)베스트프렌드개성 (주)서도 (주)녹색섬유개성 (주)에스앤지개성공장		케이엠에프개성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 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목재	
본 단 지 1 차 (아 파트 형 공 장)	30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에버그린 (주)개성스킨넷 개성팀스포츠 (주)나인모드 가드뱅크 (주)엘고개성 (주)개성자수 제이패션 (주)아진개성 (주)개성쉬크베베 (주)진성산업 (주)드림에프개성 (주)동우 (주)개성창대어패럴 개성신한물산(주) (주)와이에스개성 (주)개성금담 (주)에스앤티스포츠 개성 (주)신한모드개성 (주)광일 (주)개성성림 웅피 (주)신즈개성 청송 뷔에세 (주)새서울자수 (주)에이치디글로벌 (주)국제실크유통개성 (주)동화개성						
본 단 지 2 차	22	(주)세일개성 (주)영이너폼개성 (주)창진어패럴 개성공장 (주)흥진개성 (주)나인제이아이티 (주)아이에스레포츠 (주)인디에프개성 (주)네오로드 (주)코베 (주)제이앤제이	(주)성림 (주)프레브	(주)에스디비개성 남광엔케이(주) 개성유니 (주)개성동우	(주)명진전자 개성자화전자(주) 경원전자(주)	(주)흥익 (주)한식품	개성 하이로	

2008년에는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에 힘입어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2월에는 북한 근로자가 3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근로자 3만 9,000여 명과 우리측 근로자 1,0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 증가 추이(누계)



가동 중인 93개 입주업체의 총 투자액은 3,338억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35억 8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화학(91억원), 전기·전자(88억원), 종이·목재(40억원), 섬유(28억원), 기계·금속(26억원), 식품(25억원) 순이다.

입주기업 투자액

(단위 : 억원)

업종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목재	계
업체 수	56개사	4개사	22개사	8개사	2개사	1개사	93개사
총투자금액	1,600	364	577	707	50	40	3,338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매일 1,200여 명의 인원과 7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해볼 때, 2008년 한해 생산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36%, 북한근로자 수는 3만 9,000여 명으로 72%, 가동기업 수는 93개로 43%가 증가했고, 이는 2005년 개성공단 본격 가동 이후의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생산 및 수출 실적 (단위 : 천 US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누계(2005~2008)
총생산액	14,906	73,737	184,779	251,422	524,844
수 출 액	866	19,825	39,669	35,845	96,205

개성공단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누적 총생산액도 2007년 1월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8년 2월말 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8년까지 누적 총생산액은 5억 2,484만 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섬유 2억 5,229만 달러, 기계·금속 1억 1,730만 달러, 전기·전자 1억 148만 달러, 화학 5,271만 달러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 실적 (단위 : 천 US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누계(2005~2008)
섬유	6,780	27,793	85,543	132,179	252,295
화학	1,768	10,900	18,262	21,785	52,715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117,300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101,488
식품	-	-	-	976	976
종이·목재	-	-	-	70	70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524,844

2008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해외수출액은 전년도보다 9.6% 감소한 3,584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 851만 달러, 기계·금속 2,460만 달러, 전기·전자 273만 달러였다. 이는 전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중국·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업종별 수출 실적 (단위 : 천 US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누계(2005~2008)
화학	538	4,974	10,342	8,510	24,364
기계·금속	328	12,855	23,967	24,598	61,748
전기·전자	-	1,996	5,360	2,737	10,093
계	866	19,825	39,669	35,845	96,205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2006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08년 12월 현재, 용수시설(1일 3만톤), 폐수처리시설(1일 1만5천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61,000㎡, 소각시설 1일 12톤) 등의 기반시설과 전력시설(10만 kW)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경

2008년 6월에는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집단에너지사업이 착공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설계완료 및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에는 종합지원센터 건축 2차 계약이 체결되고, 12월에는 제1차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되었다.



평화변전소



폐기물매립시설

아울러 한국통신(KT)은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2월에 기존 653회선의 통신시설을 700회선으로 증설하여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6월~7월 기간 중에 600회선의 추가 증설

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북한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본 단지에 대한 원활한 통신 공급을 위해 9,917.4㎡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립하고, 인터넷·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국내환경과 동등한 수준의 통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형 공장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가. 법체계와 법·제도 정비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법·제도는 남북간 합의서, 남한 법규, 북한 법규가 함께 적용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남북간에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

역에 관한 합의서」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와 기타 남북간 합의서가 개성공단에 적용된다.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내법으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개성공단이 남북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단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에 확대 적용하였다.

북한의 법규는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등 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43개의 사업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 세금, 기업재정 등 하위규정의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협의가 남북간에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총 14회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나.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은 2008년 12월 현재 통일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정부 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한편, 기반시설 건설 지원, 협력사업 승인·조정, 기업 운영 관련 각종 제도 마련, 통행·통관 등의 출입제도 개선 및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술교육부, 협력부의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협의 채널로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주) 및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입주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협의체가 있다. 2008년 12월 현재 「입주기업대표자회의」, 「개성공단발전연구회」 등이 대표적인 정책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5. 기업 투자환경

가. 통행절차 개선 및 통관 간소화

공장 가동 기업 및 신축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통행량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5만 2,637명이 방문하고 차량 8만 5,626대가 개성공단을 통행하였다.

2008년도에는 남북간 상황으로 인해, 우리측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측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통행 간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8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여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성공단 방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방문신청 민원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8년 1월에는 관세청과 협의하여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1월에는 통일부와 관세청 전산시스템간 출입정보 연계를 통해 전자은행증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심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작업 심사에 필요한 차량 출발·도착 보고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였다.

통행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전자출입체계(RFID)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개성공단의 상시출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첩 형태의 방문증을 보안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방문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수속 시 심사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

빈번한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심사 시 자동심사를 위한 전자은행증이 발급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대부분의 차량에까지 전자은행증의 발급을 확대하여 자동심사 비율을 향상시켰으며, RFID 전자은행증 인식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여 세관업무의 효율도 높였다.

이러한 자동심사체계를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 인원·차량 방북 승인 시 전자증명서를 자동발급하고 민원인이 출입사무소 현장에서 전자증명서를 수령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출입편의를 제고하였다. 향후 우리측 출입심사에 활용되고 있는 전자출입체계가 북한 지역에도 시행되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통행 편의성은 중국의 홍콩-심천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그간 개성공단은 일반 수출입지역이 아닌 특수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우리측 통관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2008년 남북간 합의와는 별도로 입주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우리측 통관절차를 크게 개선하였다.

우선 2008년 1월에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통관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자 반출입신고를 기존의 전산신고와 서류제출 병행체제에서 일반 수출입과 같이 별도 서류제출 없는 전산신고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북한 개성지역에서 우리측 지역으로 돌아올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를 발급받아, 수시북한

방문증명서에 확인표를 부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전수검사 방식의 북한 통관절차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 직무교육 및 근로조건

입주기업은 북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에 인력 공급을 신청하고, 총국은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공급하고 있다. 기업은 총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기능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로 채용되는 북한 인력 및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기술교육센터는 22개의 강의 실습실, 대강당,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1일 동시 교육 가능인원은 약 700여명이며, 연간 4,000명의 기능 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가능하다.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과 종업원 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실시한다. 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북한의 명절과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150

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는 노임과 가급금,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였는데 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총국간 합의에 의하여 2007년 8월 1일 52.5달러로 인상되고, 2008년 8월 1일에는 55.125달러로 인상되었다.

기업들은 노동보수와 별개로 월 노임총액의 15%를 익월 10일까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월 노임액의 약 30% 정도를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물(생필품)과 북한 화폐로 지급받고 있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출퇴근 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근로자 공급 및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휴식시간 및 간

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샤워실·의료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금융지원 및 경험보험제도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말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원이 대출되었다. 2007년 12월부터는 기술보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8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 31개사에 대해 281억원(2008.12월 기준)을 지원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투자를 위해 국내 모기업을 차주로 하여 기금을 차입한 결과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개성공단 투자기업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대한 차주변경 신청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차주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손해보험과 유사한 경험보험제도는 기금과 기업간 손실보조약정 체결에 따라 시행되며, 약정금액은 기업 당 50억원 이내, 투자금액의 90% 이내에서 약정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2005년 7월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동 제도는 초기에는 가입업체가 많지 않았지만 2008년에 접어들면서 가입업체가 늘어 2008년 12월 기준, 94개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총 보험금액은 3,162억원에 이르고 있다.

라. 판로 지원

개성공단이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하고 입주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판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성공단 홍보관(2008.12.13 개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또한 정부는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전시회·판매전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섬유교역전」(2008.9.3~5, 코엑스), 「섬유의 날」(2008.11.12~13, 섬유·패션센터), 「부산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2008.11.20~22, 벅스코) 등 전시회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정부중앙청사 판매전」(2008.12.23~24) 개최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 및 개성공단 이미지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13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개관하였다. 이 전시관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본관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로만손, 삼덕통상, 나인모드, 제이패션 등 14개 업체가 생산한 시계, 신발, 의류, 덧신 등 각종 제품이 전시되어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연간 60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개성공단과 생산제품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개발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works」는 상표출원 중이므로 2010년 이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eaceworks」는 “평화를 심는 작업, 평화를 의미하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심볼마크는 뿌리 깊고 튼튼한 푸른 나무가 모여 풍요롭고 평화로운 숲을 이뤄 번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관계자와 각 국가의 투자가에 대한 기획방문을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까지 1,038명의 외국인 바이어와 투자가가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Peaceworks 브랜드 로고

6.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근로자의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200명 수용규모의 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8년 11월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소요예산 9억원을 확보하였다.

이 보육시설이 건립·운영되면 영유아 보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편의시설

2008년 12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우리측 근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21개 업체가 통일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13개 업종 21개 영업장에서 편의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편의시설 중에는 음식점이 가장 많아 구내식당 3곳, 한식당 1곳, 일식당 및 중식당 각각 1곳이 영업 중이며, 그 외 주요 편의시설로는 호텔, 은행,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도소매점, 차량정비소 등이 있다.

편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음식점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당구장	호프	호텔	은행
	구내식당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영업장수	3	1	1	1	3	1	1	1	1	1
업종	주유소	차량 정비소	위성방송 서비스	버스 운송업	창고 보관업	도소매점				
						부식·소모품 유통점	설비·자재 유통점	건설 공구 유통점		
영업장수	1	1	1식	1	1	1	1	1	1	1

다. 보건의료시설과 건강보험제도

개성공업지구 내 진료시설로는 「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이 있다. 우리측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설은 2005년부터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남북한이 각각의 건물에서 각기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였으나, 2007년 4월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여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을 개원하였다. 이 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여 각기 자기측의 근로자를 진료하되, 수술실·방사선실·검사실·초음파실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 이전까지는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우리 근로자 대상 진료)에 8명의 상근요원(의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북한 의사 2명, 북한 간호사 2명)과 순환진료진(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남측 전문의가 요일별로 순회 진료), 북한 종합진료소에 13명(의사 6명, 간호사 4명, 운전기사 2명, 행정요원 1명)

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 남측의 근무인력은 3명의 상근요원(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과 출근의료진(내과·외과의 중 1명이 매일 출근), 순환진료진(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요일별로 순회 진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측 근로자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성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는 2008년 7월 3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측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그린닥터스 진료 실적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측	북한	응급후송*
2005년	6,169	5,362	807	71
2006년	7,232	5,834	1,398	58
2007년	43,413	7,647	35,766	47
2008년	69,724	7,751	61,973	135

* 응급후송은 남측 근로자에 대한 실적임

제4절 남북관광협력

1. 금강산 관광

2008년 상반기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금강산 승용차관광이 2008년 3월 17일부터 시작되어 1,397명이 승용차로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며, (주)에머슨퍼시픽이 운영하는 금강산골프장이 5월 28일 정식으로 개장되어 금강산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인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934,662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신변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남북은 2008년 2월 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어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후속회담 등이 개최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08년 7월 11일 새벽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장전향 북한측 구역 내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2008년 7월 12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오히려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개성관광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는 개성 시범관광에 합의하고 그해 8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을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인 관광은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7년 11월 3일 현대아산과 아태간에 「남북관광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2007년 12월 초부터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대아산은 2007년 12월 4일 통일부에서 개성관광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2월 5일부터 개성관광을 시작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기존의 7

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안전시설 보수 및 방북교육 강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였다. 2008년 10월 15일에는 개성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섰으며, 11월 29일 개성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11만 549명의 관광객이 개성을 다녀왔다.



개성 선죽교 관광

개성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07. 12월	'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08	7,427	9,049	8,540	11,400	11,536	11,953	12,168	11,607	7,447	5,770	7,348	6,304	110,549

* 2005년도 시범관광 1,484명 포함시 총 112,033명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2008년 남북 민간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 속에서도 체육, 종교, 교육, 학술 등 각 분야별로 추진되었다.

사회문화분야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2,557명(228건), 방남인원 172명(8건)으로 2007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고 신규 사회문화협력사업의 승인 건수는 3건으로 지난해 20건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교류 자체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6.15 공동위원회」 차원의 「6.15 민족통일대회」와 언론·농민·여성·교육 등 부문별 공동행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예술분야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윤이상 평양음악회」, 「통일문학」 공동발간 등이 성사되었다. 교육학술분야는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북한 IT 인력 교육,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종교분야에서는 평양 봉수교회 헌당예배, 장충성당 미사, 평화통일기원 기도회 등 대규모 남북 공동기도회가 성사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북한 레슬링·유도·축구대표팀 방한, 남한 유소년 축구팀 방북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1. 남북공동행사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2001년부터 해마다 6.15 및 8.15를 계기로 남북을 오가며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2008년 「6.15 남북공동행사」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측 249명, 북한측 100명, 해외측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로, 6월 15일의 본 대회와 공동사진전에 이어 6월 16일 공동위원장 회의, 폐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 위원회」간 부문별 교류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6.15 남측위원회 산하 9개 분과 중 노동·청년학생·농민·교육·학술·여성·언론 등 7개 분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그간 대규모 행사 위주로 진행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실현가능한 소규모 사업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2008년도 8.15공동행사와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남북 합의에 따라 각자 개최하였다.

2. 문화·예술 교류

지난해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분단 이후 남북한 문인이 공동으로 만든 최초의 문학잡지인 『통일문학』 창간호가 2008년 2월 5일 평양에서 5,000부가 발행되어 국내에 2,000부가 반입되었고, 제2호도 2008년 7월 31일 발행되었다. 또한 200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7차 「윤이상 음악회」에서 남북의 음악가가 협연하였다.

한편,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이 2008년 2월 26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있었다. 공연에서 무대 양 옆에 미국 성조기와 북한기를 게양하고

북한 국가, 미국 국가 등이 연주되었다. 뉴욕필은 2월 27일 오전에는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미북 실내악 협연을 펼쳤다. MBC는 동 공연에 중계장비를 지원하였다.

3. 역사·학술 교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2007년부터 추진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2008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남북의 전문가 등 총 60여명이 참가하여 만월대 서부건축군 중 경령전 구역 3,000㎡를 남북 공동작업으로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경령전 동쪽의 13여 개의 건물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유물 총 3,60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조사에는 2007년 1차 발굴에 참가하였던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2008.11.4~12.23)



발굴유물

또한, 남북역사학자의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2008년 4월 25일에서 26일까지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1차 학술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으며, 2008년 6월 19일에서 20일까지 2차 학술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임진왜란에서 3.1운동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관련 용어 300여 개를 남북공동으로 선정·집필하는 것으로, 역사용어는 남북이 공동으로 선정하고, 집필은 남북이 따로 시행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수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례 학술회의를 통해 총 1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300건의 역사용어에 대한 원고를 남북이 교환하였다.

남북의 언어를 통합·정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8년도에도 총 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1차로 38만여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였으며, 남·북·해외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새 어휘 약 8만 7,000여개를 조사·발굴 하였다.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2008년에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우리민족인재양성센터가 중국 단둥에서 추진중인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1차 교육은 2008년 6월 9일에서 8월 15일까지(30명), 2차 교육은 9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30명) 추진되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0명이 임베디드(Embedded), 네트워크 구축, 자바(Java) 과정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 대학생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4. 체육 교류

2008년도 체육분야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국제경기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남한을 방문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북한 레슬링 선수단 15명은 「2008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북한 유도 선수단 17명도 「2008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체육 교류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로서, 6월 22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북한대표팀은 6월 19일 방남하여 23일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당초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 및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남북 경기」는 3월 26일과 9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어 우리 대표팀이 북한에서 경기를 갖지는 못하였다.



남북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 경기 (2008.6.14~26, 10.8~18, 평양)

또한 우리측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체육단이 「남북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를 위해 우리측 유소년축구선수단이 방북하여 경기를 가졌다. 2008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30명의 선수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네 차례,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50명의 선수단이 방북하여 세 차례의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 밖에 「2008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가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사)ITF태권도협회 남북대표단 60명이 방북하여 북한의 태권도 시범공연, 남한사범의 북한 선수에 대한 태권도 기술교육 실시 등 교류행사를 진행하였다.



2008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2008.6.28~7.1, 평양)

5. 종교 교류

2008년도 종교분야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방북인원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방북 종교행사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그 동안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북한지역에서의 종교시설 복원이나 남북협력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다.

기독교계의 교류는 방북행사 위주로 추진되었다. (사)기쁜소식에서는 2008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 봉수교회에서 헌당예배를 개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공동으로 「2008 평화통일 남북교회 기도회」를 평양 봉수교회에서 개최하여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동 기도회는 매년 금강산에서 개최해 왔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방문이 여의치 않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창립 34주년과 장충성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공동으로 「평화통일기원 미사」를 봉헌하고자 북한을 방문하였다. 방북기간 중 평양 장충성당에서 진행된 평화통일기원 미사에는 우리측의 신부 및 신도 등 96명과 북한의 장충성당 신도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불교계에서도 각 종단별로 접촉과 교류는 계속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북한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 문제를 논의하였다. 동 방북에서 중앙신도회는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

왕실의귀 반환요청서 작성 및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공동 합의를 체결,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남북불교도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2007년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 불교교류 방안을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기도 하였다. 대한불교 천태종과 진각종에서도 여러 차례 방북하여 공동법회 개최, 불교복지시설 건립 등 남북 불교교류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당국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북한 단군유적 답사, 을사늑약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개천절 공동행사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꾸준한 접촉을 가졌다. 단군문화유적답사 대표단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평양 단군릉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민족자주역사대회와 개천절 공동행사는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다.

6. 지방자치단체 교류

사회·문화·종교·체육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은 1998년 강원도에서 최초로 설치한 이후 13개단체(광역 9, 기초 4)에서 748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6년에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다. 2008년도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는 11월 7일 개최되었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간 대북교류사업 추진사례 발표, 지자체간 남북교류 정보교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사업 추진실적

시도별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 백만원)
서울특별시	평양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800
인천광역시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 지원	1,414
울산광역시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결핵치료약품 지원	226
경기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352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795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635
강원도	안변언어사료공장 완공,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 등	709
충북	봉산군 천덕리 협동농장 옥수수 단지	190
충청북도 제천시청	제천시-북고성군 남북협력사업 확대 지원	100
전남	평양 발효 콩 빵공장 건립 지원	860
경남	평양 과수원 조성, 수해피해 가정집 복구자재 지원	1,000
경북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100
제주	평양 흑돼지 사육협력사업 지원	200

제6절 기타 남북교류협력

1.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남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합의서가 발효되지 못하다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 합의서」를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 25일 제1항차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 이래 2008년 3월 31일까지 총 26항차에 걸쳐 단섬유 등 섬유 원자재 39개 품목(2,583만 달러 상당), 고무혼합물 등 신발 원자재 48개 품목(4,293만 달러 상당), Soap Chip 등 비누 원자재 7개 품목(1,124만 달러 상당) 등 총 8,000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7년도 상환분인 240만 달러(8,000만 달러의 3%)를 2차례에 걸쳐(2007.12.24, 2008.1.4) 아연괴 약 1,005톤으로 상환하였다.

우리측은 4차례(1차: 2007.8.7~11, 2차: 2007.10.23~27, 3차:

2007.12.3~8, 4차: 2008.1.21~26)의 기술지원과 현장점검을 위해 북한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우리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협의하였으며, 북한 경공업 전문가의 견문확대를 위해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남북전문가 해외공동방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실시한 북한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연·아연 광산, 대흥 및 룡량 마그네사이트 광산) 현지 공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5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산개발 투자는 경제성이 있으나 철도,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업 협력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기존의 일회성 대북지원에서 벗어나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민간 전문단체를 통해 시범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통일농수산사업단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금강산 지역의 삼일포·금천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영농기반 강화사업과 기술교류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금강산지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공동영농사업 대상지역을 개성

지역의 송도리협동농장으로 확대하였다.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은 2005년에 삼일포협동농장과 인근 협동농장 600ha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2006년에는 310ha 규모의 금천리협동농장으로 확대되었고, 3개년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기존 사업지에서 충분한 생산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하에 거점 지역인 420ha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협동농장의 협력기반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삼일포협동농장 시범농장 105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금강산 금천리협동농장 고구마 수확

한편,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은 2007년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300ha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2008년에는 506ha로 확대되었다. 2년간 영농기반 강화와 기술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벼의 경우 ha당 최고 4.8~5.2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금강산지역(4톤/ha)과 최근 우리 강원도지역의 평균(4.5~4.9톤/ha)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동영농사업의 성과 중 하나는 기술을 매개로 한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술교류 과정에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농업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공동영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켰다.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벼 수확

제 4 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5절 북한인권문제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간 인도분야는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인도분야의 협력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주민의 분단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이 구현되는 「행복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산가족 분야에서는 2008년 중 당국차원의 상봉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중단없이 지속되었다. 7월에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어 이산가족 교류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2008.6.6), 국회 개원연설(2008.7.1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만큼, 향후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북한에 제기할 예정이다. 전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제정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족 피해위로금, 탈북 귀환 납북자 정착금이 지급되면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8년에는 당국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민간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대북지원은 지속되었다.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남북협력기금 집행과정 및 대북지원 민간단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이후 차관형식으로 제공되었던 쌀 지원이 2009년부터 인도적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게 무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분배투명성 확보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우리정부의 지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인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말에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되면 다양한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 중 2,809명이 입국하여 총 국내입국 인원은 1만 5,057명에 이르렀다. 입국인원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부, 기업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인권 문제는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을 탈피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에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동시에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제1절 남북 이산가족

2007년 11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연간 대면상봉인원 400명, 분기별 화상상봉 40가족, 분기별 영상편지교환 30가족 등 상봉규모의 확대와 정례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2008년 초에 성사된 영상편지 시범교환을 제외하고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북은 2008년 2월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각각 20가족씩 미리 제작한 영상편지를 교환하였다. 영상편지 교환은 상봉행사를 통해 이미 가족을 상봉하였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감회와 현재 소식 등을 영상으로 담아 전달하는 것으로, 상봉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교환된 북한측 영상편지는 연락처 확인을 거쳐 곧바로 남한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확대와 상시상봉체제 실현을 위해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제의에 따라 남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에서 최초로 금강산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이후 경의선이 연결되면 서부지역 면회소 추가 설치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2003.11)에서는 우리측이 이산가족면회소를 전담하여 건설 및 관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2007년 12월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에 이어 2008년 7월 12일 공사시작 2년 11개월만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하였다. 금강산 관광특구지역 내에 위치한 이산가족면회소는 연면적 19,835㎡로 지하1층·지상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동으로 구성되었다. 면회소동의 경우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이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상봉행사의 경우, 우리측 가족들은 해금강호텔에서, 북한측 가

족들은 금강산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가족간 상봉시간이 길어져 이산가족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상시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면회소 개소를 잠정 보류하고,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상봉 규모의 확대, 상봉 프로그램의 다양화, 상봉횟수의 확대 등을 담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합의서」를 북한과 협의하여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차원의 상봉중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지속되었다. 2008년중 314건 375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이 제3국을 통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북한 가족과 교류하였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교류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남북협력기금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산가족 위로행사(2008.8.13, 서울)

정부는 또한 당국간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대한적십자사·이북5도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13일 서울(통일교육원)을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가족을 상봉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였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거주 이산가족들을 찾아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방순회설명회도 전주, 안동,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개최하였다. 특별히 80대 이상의 고령이산가족 3만 339명을 대상으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신을 발송하여 상봉행사가 중단되어 이산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정부는 향후 이산가족 교류재개에 대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http://reunion.unikorea.go.kr>)를 개편하였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메뉴와 디자인을 간결하게 하였고, 기존의 영상편지 동영상서비스와 이산가족정보의 실시간 확인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청결과와 민원처리 결과를 이메일 및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주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4,310	29,393	33,740	13,262	7,712	88,417
신청비율(%)	4.9	33.2	38.2	15.0	8.7	100

* 총 127,343명 등록(사망 38,926명 , 생존 88,417명)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6.25전쟁 휴전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송환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는 한국전쟁의 전선범위, 성격 및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 이후 2008년까지 총 76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하였고,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현재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 중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이후 총 3,811명이다. 이중 3,310명(87%)은 납북 직후 1년 이내에 귀환되었으며, 7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9월 30일 납북피해자보상지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길용호가 납북사건으로 추가 인정됨에 따른 납북자 명단조정 결과 2008년 말 현재 미귀환자는 494명으로 추정된다.

전시 납북자 관련 통계

구 분	출 처	인 원
서울시피해자명단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0)	2,438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2)	82,959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3)	84,532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내무부 치안국(1954)	17,940명
실향사민등록자명단	대한적십자사(1956)	7,034명

전후 납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어부	KAL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11	3,710	50	25	6	20
귀환자	3,317	3,270	39	-	-	8
미귀환자	494	440	11	25	6	12

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 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제2차부터 2007년 제16차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11명의 국군포로와 14명의 납북자가 남한의 가족을 상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85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후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과 상이의 피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자문제 실태조사, 납북자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이 있으며, 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인 정부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법 시행 직후부터 피해위로금 신청 등 납북피해 지원신청이 접수되어 2008년 말까지 총 239건에 이르렀다. 2008년 5월부터 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어 총 186건, 60억 2,600만원(피해위로금 183건, 정착금·주거지원금 3건)의 지급이 심의·의결되었다.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현황

(단위 : 건)

합 계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소계	어부	I-2정	KAL기	기타	
소계	239	207	6	6	13	7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청	지원결정	지원액(천원)
합 계	239	186	6,026,279
피해위로금	232	183	5,473,310
정착금·주거지원금	7	3	552,969

위원회에서는 법률시행 등 정부의 납북자 지원정책을 적극 알리기 위해 납북자가족에게 안내서한을 발송하고, 납북자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다. 또한 납북자가족이 대부분 고향자 및 지방 거주자인 점을 고려하여 강원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고향자 및 지방거주 납북가족들의 피해위로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라디오, 신문,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신청 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unikorea0>)를 개설(2008.3)하여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 안내, 각종 신청서 등 민원 서식을 게재하고 있다.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일자	위원회	위원회 결과
2007.11.30	제1차 위원회	위원장 호선,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1.17	제2차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분과위(2개) :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 납북피해산정 분과위
2008.2.13	제3차 위원회	납북피해자단체(납북자가족협의회) 인정
2008.4.17	제4차 위원회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납북피해자단체 사업비 집행지침 제정
2008.4.29	제5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30건, 954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151백만원
2008.5.30	제6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35건, 1,006백만원 위원회·2개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08.6.30	제7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9건, 792백만원
2008.7.25	제8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5건, 784백만원
2008.9.30	제9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2건, 641백만원 납북피해자단체(납북자가족협의회) 사업비(7백만원) 지원결정
2008.10.30	제10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7건, 511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187백만원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08.11.27	제11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3건, 374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215백만원
2008.12.16	제12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4건, 412백만원 납북피해자단체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주요 활동

구 분	지역 및 수단	회 수	참여인원(명)	비 고
정책설명회	부 산	1회	33	남북자가족 및 관련기관
	강 원	3회	107	"
	전 북	1회	28	"
	경 남	2회	21	"
이동민원실	강 원	1회	57	"
	경 남	1회	14	"
정책 홍보	관 보 홈페이지 일간지 카페 운영	1회 22개 기관 3회 연중		2008년 10월 10일 6개 부처, 16개 지자체 조선·중앙·동아일보 http://cafe.daum.net/unikorea0

또한 남북자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생계 곤란자, 고령자에게 연말 연시 또는 명절에 쌀과 생필품, 소정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남북자가족에게는 사단법인 '사랑담는 사람들' 과 동해시 소재 동인병원과 함께 생계,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민원 현장



의료지원

제3절 인도적 지원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집행투명성 제고, 민간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2차례 개정(2008.6, 2008.11)하였다. 2009년도 기금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과정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동안 차관방식으로 제공해왔던 식량지원을 본래 인도적 지원 취지에 맞추어 무상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북지원시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옥수수 5만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으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원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북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민간차원의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은 물론, 민족적 동질감 형성에도 기여해왔다. 대북지원 초기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 위주에서 최근에는 기술전수나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지원성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 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들로 다양화·전문화 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통행인원 제한조치로 예년에 비해 지원사업의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지원은 꾸준하게 지속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농업생산성 개선, 보건의료체계 복구, 어린이·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왔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원이 시급하며 분배투명성이 확보된 사업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었다. 정부는 2008년도에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 정책사업, 합동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62억원을 지원하였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1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정부는 2000년 7개 단체에 33억 8,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7개 단체, 40개 사업에 100억 6,000만원의 남북협력기

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42개 단체, 44개 사업에 117억원을 지원했던 2007년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된 규모이다. 대북지원 분야도 식량, 의류, 생활필수품 등 일회성 긴급구호 차원에서 점차 의료시설 개보수, 주택개량, 농촌지역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민간단체의 지원품목도 의약품, 영농자재, 묘목, 가축사육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사료공장 원료 지원, 채소농장, 농업기술 지원, 야궁이 개량, 조림사업 등에 지원하였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현대화, 의약품 지원, 의료장비 지원, 결핵퇴치사업 등에 기금이 지원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유아 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어린이 급식사업(밀가루, 빵, 국수, 콩우유 등), 어린이 교육기자재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재배기술 전수, 공동의료기술, 제약공장 기술전수 등 전문가들의 교류도 진행되었다. 민간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북한측의 육로 통행 제한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방북인원 9,898명의 45% 수준인 4,47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8년 민간단체 개별사업 기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내 용	지원액
농업환경	식량증산 농업개발사업(월드비전) 등 15개 사업	3,096
보건의료	어린이 보건의료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12개 사업	3,034
사회복지	취약계층 종합지원사업(등대복지회) 등 13개 사업	3,934
합계	37개 단체 40개 사업	10,064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기금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북지원물자에 대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매칭비율을 기존에 정부 70%, 민간 30%에서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체의 집행증빙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나. 합동사업

2004년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통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이 일회성 일반 구호 중심의 지원에서 북한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이상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성 사업을 진행하는 합동사업을 2005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2008년에는 대북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여 18억 8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기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관단체	사업내용	자체 재원	기금 지원	총사 업비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남북나눔	농민주택 신축, 유치원, 탁아소, 보건소 물품 지원	1,413	1,413	2,826
종합검진· 검사센터 개설	나눔 인터내셔널	센터 공사자재 및 의료장비 지원 의료 기술전수	395	395	790
합 계			1,808	1,808	3,616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황해도 봉산군 천덕리 마을 개량사업으로 주택 신축, 유치원, 탁아소, 간이진료소 등에 생활필수품 지원, 유실수 조림, 양돈사료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사업은 평양에 검진·검사센터를 건설하여 평양과 지방 병원을 연계하여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 정책사업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개발지원성 사업을 선정하여 전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2007년에 도입하였다. 북한 산림복구 필요성과 보건의로 인프라 구축, 농자재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북한산림녹화 시범사업, 북한의료인력 교육훈련 사업,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33억 6,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2008년 민간단체 정책사업 기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진단체	사업내용	지원액
결핵 관리 사업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결핵예방원 시설 개보수(1개소) 결핵 진단장비 및 소모품 지원 기술교육	1,000
의료인력 교육 사업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의료인 국외 및 평양 현지 교육 의료기기수리인력 교육	1,085
제약공장의약품 생산 협력사업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원료의약품 지원 기술(GMP) 교육	1,000
산림녹화 시범 사업	겨레의 숲	양묘장 조성(3개소), 종자보관관리시설(1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시범조림	1,250
합 계			4,335

2008년에도 정부는 북한 보건의로 환경 개선과 북한 산림복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사업인 북한 의료인력 교육사업,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 협력사업과 산림녹화 시범사업 등은 계속 지원키로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결핵예방원 시설개보수, 진단장비지원, 기술교육을 위한 결핵관리사업에 각기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 4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다.

라. 북한 영유아 지원

정부는 북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통일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5년 북한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2006년부터, 민간단체를 통해서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남포산원 현대화), '남북어린이어깨동무'(남포 소아병원 현대화),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어린이 영양식 생산시설 건립), '어린이재단'(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한국JTS'(회령 모자보건센터 신축 및 영양사업) 등 총 5개 민간단체 컨소시엄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2007년에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으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남포산원(외래병동), 남포소아병원(입원병동), 대안군 인민병원(산과·소아과)의 의리시설 등은 2009년 중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월 7일에 한

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업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포산원 등 병원 현대화 사업과 영양식 지원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북한과의 협의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은 물론, 보건의료나 영양 등 관련 분야의 대북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의 대북지원 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이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2008년에는 3개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 4건에 대해 1,604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북한 말라리아 방제와 관련하여 120만 달러(질병관리본부지원액 제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1,027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말라리아 방제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연 1회, 북한 영유아사업의 경우 연 1~2회 세계보건기구와 남북한이 참석하는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2008년의 경우 말라리아 회의는 1월에 중국 상해에서, 영유아사업의 경우 3월에 중국 북경에서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하반기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남한 정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간 사업협의를 이루어지지 못했다. WHO의 영유아사업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사

업평가를 위해 호주 멜버른 대학이 북한 현지를 방문(2008.4.8~22)하여 외부평가를 진행한 후, 세계보건기구의 영유아 지원사업이 북한의 보건의료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008~2010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원의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어 객관적인 사업평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408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및 콜드체인(cold chain; 의약품 유통·운송시 냉장유통 체계) 구축사업, 영양사업, 식수위생 사업 등이다.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을 통해 북한은 BCG 등의 필수 예방접종에서 9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최빈국 아동들에게 만연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해, 2007년에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는 2008년 7월까지 일본뇌염 및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실 장비 등을 지원하고 북한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백신지원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백신연구 및 전염병 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위주의 사업조건을 부과하여, 2008년 11월 18일에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지원사업에 대해 49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여 이중 19만 달러를 집행하고 30만 달러를 이월하였다.

한편, 세계식량기구(WFP)는 2008년 6월 북한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북한 식량상황,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WFP를 통한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내역

① WFP(식량지원)

(환율은 해당연도 기준 적용)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 달러(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 달러(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 달러(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 달러(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 달러(235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 달러(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334만 달러(240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 달러(190억원)
계	543,950톤	12,770만 달러(1,434억원)

② WHO(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 달러(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 달러(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 달러(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 달러(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 달러(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 달러(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 달러), 영유아 지원(1,067만 달러)	1,167만 달러(116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	138만 달러(12.9억원)
	영유아 지원(938만 달러), 홍역 지원(105만 달러)	1,043만 달러(98.9억원)
2008	말라리아 방역(120만 달러), 영유아 지원(1,027만 달러)	1,147만 달러(148억원)
계		3,904만 달러(423.1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 달러(8억원)
1997	탈수방지제(ORS)공장, 분유781톤	394만 달러(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 달러(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 달러(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 달러(10억원)
2006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230만 달러(23억원)
2007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315만 달러(29억원)
2008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408만 달러(47억원)
계		1,697만 달러(170.4억원)

④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1996	WMO	기상자재	5만 달러(0.4억원)
1997	UNDP	지원	120만 달러(11억원)
	FAO	지원	30만 달러(3억원)
2007	IVI	백신, 의료교육	50만 달러(4.6억원)
2008	IVI	백신, 의료교육	19만 달러(2.5억원)
계			224만 달러(21.5억원)

3.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별도로 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총조사사업을 지원하였다. UNFPA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한 인구 총조사 실시를 위해 2007년 4월 1일, 북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동 사업의 의의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2007년 6월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지원 등을 위해 통일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인구조사, 북한경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북한 인구총조사는 UNFPA에 의해 1994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8년이 두 번째로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현상 및 북한주민의 생활상 파악은 물론, 북한의 중장기 경제계획 수립, 남북경협 등 종합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UNFPA는 인구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교육 및 전문가 세미나와 예비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 까지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조사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3만 5,000명의 현장 조사요원과 7,500명의 지도요원, 북한 중앙통계기관 종사자 1,400명 등 총 4만 4,000명의 인구조사요원이 동원되었다. 인구조사시 조사요원이 호별방문을 통해 가족 수, 연령별 인구, 직업, 개인소득, 주택양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등을 조사하였다. 인구조사 질의서에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교육 정도, 국가내 이동, 장애 여부, 출생률, 사망률 등의 문항이, 주택조사 질의서에는 화장

실 유무, 난방과 상하수도 유무 등 총 5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현재 UNFPA 자문하에 자료분석 작업이 진행중이며, 2009년 12월 경 최종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UNFPA는 통계분석작업을 위해 북한 통계요원을 선발하여 컴퓨터 자료처리 방법, 각종 소프트웨어 취급법, 분석 기술 등을 훈련시키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이번 UNFPA의 북한 인구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파악해 중장기 남북관계 계획수립 등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8년 12월까지 총 1만 5,05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8년도에는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 시행)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89 이전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남성	562	115	43	56	53	90	179	294	506	469	626	423	509	570	612	5,107
여성	45	12	13	30	18	58	133	289	632	812	960	1,268	1,509	1,974	2,197	9,950
합계	607	127	56	86	71	148	312	583	1,138	1,281	1,383	1,894	2,018	2,544	2,809	15,057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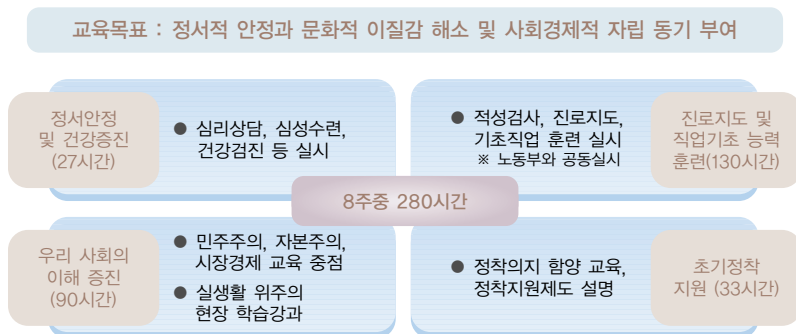
2008년에는 2007년 초에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였다.

1. 사회적응교육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주거알선,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착금 등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과 초기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시작된 시설증축이 2008년 12월에 준공됨으로써 적정 동시 수용능력이 300명에서 750명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8주간의 하나원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기르게 되며, 2009년 초부

터 사회적응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아래 <표>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교육 기간중 심리, 진로, 의료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심리상담실, 진로상담실, 하나의원(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종교단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원 분원을 설치하여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아동의 경우 하나원 인근에 있는 학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개원 이후 2008년 12월 현재까지 총 1만 3,479명이 하나원을 수료하였다.

2. 정착지원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은 통일정책의 맥락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우리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정착장려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착지원의 목표는 단순한 수혜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있다.

가. 초기 정착금 지급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08년 현재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원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정착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140만원으로, 장려금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착금 수혜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6~12개월	개월×20	
	1년 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수혜자 중 자격취득자	200	
취업 장려금	1년~3년	450~550	
총액(최고액) 2,140			

2005년부터 도입된 정착장려금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지급인원은 1,141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다. 이는 정착장려금 제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착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명)

연도	종류	직업훈련	자격취득	우선선정 직종 등	취업	계
2006	지급액	13,480	8,400	600	600	23,080
	인원	112	42	3	3	160
2007	지급액	36,000	43,400	9,800	12,150	101,350
	인원	289	217	49	28	583
2008	지급액	62,940	69,040	18,800	89,100	239,880
	인원	500	346	94	201	1,141

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한다.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연령 가산금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한부모가정아동 보호 가산금	한부모 아동	360

나. 주택 지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이후 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주택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 주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한다.

다. 취업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3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와 노동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 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2008년에는 제과·제빵 기능사, 조리사, 귀금속 디자인 과정 등이 개설되어 총 83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을 수료한 58명 중 44명이 협력 기업체에 취업하여 75.8%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직업훈련 후 취업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하나원과 남북평화재단 및 대우차판매(주) 간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관계(새터민 일자리 창출사업 업무협약, 2007.10.23)는 2008년에 더욱 발전하여, 대우차판매(주)는 하반기에 북한이탈주민 23명을 정비사로 신규 채용하였다. 그리고 하나원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협력하여 '메자닌아이팩'이라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노동부 산하 전국 54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55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하기 위하여 11월에 통일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전국 7개 고용지원센터(서울남부·서울북부·경인·수원·대구·광주·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참가하여 346명이 면접을 보고 33명이 채용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01	'02	'03	'04	'05	'06	'07	'08
업체수(개)	226	274	240	218	323	378	564	888
인원(명)	251	296	310	269	446	497	728	1,111
지급액(만원)	99,965	113,025	109,416	94,461	142,628	140,200	224,033	349,457

고용지원금 수혜 인원은 2004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년보다 수혜인원이 53%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도입된 취업장려금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고용지원금은 기업체에 대해,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원에서 2007~2008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423명 중 78.6%가 직원으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성실성과 책임감이 높다고 답하였고, 72.3%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고용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94.9%를 차지하였다.

라.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대학교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있는 만35세 미만인 사람이 입학할 때 학비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진학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 입국 인원중 10대 청소년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입국한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모두 254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지원하고 있다.

마.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지급기준(최고액)

(단위 : 만원)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1인세대	38	4인 세대	105
2인세대	65	5인 세대	124
3인세대	85	6인 세대	143

바. 거주지 보호 및 민간을 통한 지원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착도우미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며, 2008년 12월 현재 2,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앞에서 언급한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008년 현재 전국 211개 지자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

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 실태 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4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도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심리상담, 청소년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협력사업을 지원하며, 60여 개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단체 및 보호시설 지원, 여성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정신건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오랜 기간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진출 이후에 일정기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원해주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하나원을 수료한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실정에 맞는 '지역안내 및 취업·진학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

이다. 「지역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제5절 북한인권 문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의 인권실태 파악,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탈북자 지원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과 협력하여 『북한인권백서』(국·영문)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발간하는 북한인권 관련 간행물의 배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의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 유엔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민간과의 협력차원에서 정부는 민간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 및 북한인권 관련 책자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주재국과 협의해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2008. 3.3)에서 우리정부는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기본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이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직접 촉구한 것이다. 우리정부의 발언 이후 북한은 답변권 행사를 통해 “한국정부가 2000년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정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며,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북한은 3월 6일 조선중앙통신 대변인을 통해 남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발”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제7차 인권이사회에서는 6월에 임기만료가 예정된 비티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결의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우리 정부는 임기연장에 찬성하였으며, 투표결과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2009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되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심각성, 여성·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면제 등 6개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침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정부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평가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권고를 위해 특별보고관의 방북 협조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차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태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북한이 유엔 인권협약 중 4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6일에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24일 ‘대결기도를 드러낸 불순한 인권소동’ 제하의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하여 북한을 모해하기 위한 범죄적 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입장

구분	UN 인권위원회			UN 인권 이사회	UN 총회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8년 (7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2008년 (63차)
년도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8년 (7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2008년 (63차)
표결 결과	28:10:14 (찬:반:기권)	29:8:16	20:9:14	22:7:18	84:22:62	91:21:60	97:23:60	95:25:62
우리 입장	불참	기권	기권	찬성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안 찬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투표에 불참하였고, 제60차(2004년), 제61차(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와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된 제62차 유엔총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우리정부는 기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11월 21일 개최된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

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취했던 입장에서 크게 나아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취하였다.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안 상정시 박덕훈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를 통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하며, 결의안은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사기”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2000.11.11)을 통해 “공동제안국 참여는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2008년 제63차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요약

- 북한내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
- 외국인 납치와 관련 북한정부가 피랍자의 즉각 송환에 대한 보장을 포함, 적극적 해결을 요청
- 모성 및 유아 영양실조의 만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 북한정부의 예방적·구체적 조치를 촉구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그간 활동을 평가
- 북한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
- 64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제 5 장 남북대화

제1절 군사분야 회담

제2절 경제분야 회담

제3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제5장

남북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은 언제든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북한은 6.15 및 10.4선언의 존중 및 이행을 요구하며 대남비난을 전개하면서, 3월 24일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3월 29일 남북 당국간 모든 대화와 접촉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남북간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진정성있는 남북 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회견(2008.4.17)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 상설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53

회 현충일 추념사(2008.6.6), 제18대 국회 개원식 연설(2008.7.11),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사(2008.8.15),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개회사(2008.9.23) 등을 통해 직접 전면적인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대화재개 촉구를 비난, 거부하였다. 11월 12일에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시 하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의 폐쇄와 남북 직통전화의 단절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6.15 및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고, 북한의 조치가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반됨을 지적하면서 제반조치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2008년의 남북관계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조정기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하여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차분히 관리하는 한편, 주요 계기시마다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는 군사회담 2회, 경제회담 3회, 사회·문화회담 1회 등 총 6회가 개최되었다.

제1절 군사분야 회담

1.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월 25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철(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김정배(국방부 중령) 황봉연(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25, 판문점)

북한측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군사적 보장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화물열차 운행 이후의 화물량을 문제 삼으며 이에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열차운행이 초기단계여서 화물량이 적기는 하나, 열차운행상의 안전성 점검 필요성과 향후 화물열차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추후 전화통지문을 통해 입장을 교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1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화물열차는 매일 운행하되, 화물 적재화차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며, 세부사안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북한측은 9월 2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군사당국사이의 합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9월 30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내부 일정을 감안하여 10월 2일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0월 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철(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김정배(국방부 중령) 한기수(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북한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우리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가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단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우리측 인원의 통행과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우리측 인원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첫째,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둘째,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현재 개성 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에 있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다만 우리 사회체제의 특성상 비무장지대 밖에서의 민간단체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이 전단살포 문제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 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난 중지 문제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원인과 책임이 오히려 우리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 통행불편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먼저 해야 할 바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10월 27일 경의선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이 진행되어 전단살포와 군 통신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각자의 입장을 검토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제2절 경제분야 회담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 까지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위 원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석영철(철도성 부원) 림대석·엄세룡·류지상 (민족화해협의회 참가)

우리측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1차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2차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방식을 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운행하는 것으로 개선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열차화물 증대를 위해 북한측이 판문역 출입절차 간소화와 벌크화물 수송문제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 등을 우선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산~봉동간 열차화물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1.29~30, 개성)

쌍방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와 관련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운행한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 적재 화차만,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2월 1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11월 28일 이후 열차운행이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 11일 화물열차 운행이 개시된 이래로 중단되기 전까지 총 222회가 운행되었다.

공동보도문 요지

-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2007년 12월 중 실시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과 개보수 이후의 구체적인 공동이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명국(건설교통부 도로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 보호성 부국장)
위 원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상호·김성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백문길(민족화해협의회 실장)

북한측은 고속도로의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를 우선 확정하자고 요구하면서, 공동이용 문제는 개보수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은 구체적인 개보수 방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의 현지공동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계획, 개보수 방안과 공동이용 문제 등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2.12~13, 개성)

공동보도문 요지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
-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 협의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이 2008년 2월 5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강용태(조선아태평화위원회참사)
대 표	정성태(통일부 서기관) 김훈아(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 사무관)	리덕수(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부국장) 한웅희(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우리측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제기해온 통행검사소 건립을 관리위원회의 설립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관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통행검사소의 건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2008.2.5, 개성)

쌍방은 양측 입장을 집중 토의한 끝에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동해선 북한통행검사소의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으며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 등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서 요지

-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
- 남과 북은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

제3절 사회 · 문화분야 회담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이 2008년 2월 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우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 철(민화협 부장)
대 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팀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 부국장)

북한측은 남북 응원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여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는 제1차 실무접촉 시의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고,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기로 하였다. 응원단 이용열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동 문제가 경의선 개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절충하였다.

쌍방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후속회담이 개최되지 못하여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참여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2008.2.4, 개성)

합의서 요지

-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
- 응원단은 개·폐막식에 참가,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
-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결정
-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
- 응원단 이용열차 및 편성 등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
- 제3차 실무접촉은 편리한 시기에 개성(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

제 6 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제1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제2절 통일정책 홍보

제3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제4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제5절 통일교육

제6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는 통일정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였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남북관계 분야별 자문회의 운영, 정책고객과의 대화, 상생공영포럼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인터넷을 통한 정책홍보, 남북관계·북한 관련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각종 홍보자료 발간,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조화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통일전략대화, 해외인사 초청 간담회,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1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정부는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상생공영정책, 대북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사를 파악하는 동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활용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새로운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다. 4월에 실시한 통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56%의 국민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75%가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4월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대남비난에 대해서 정부가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63%)하였다. 또한 정부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삼고 민간교류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 국민들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남북경협 등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의견(34%)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출범초부터 일관되게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또한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64.6%)하였다.

식량·비료 등 대북 지원에 대한 5월 조사에서는 ‘북한의 요청’이나 ‘북핵문제 진전’ 등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인 반면, ‘조건없이 지원’ 하자는 의견은 14.1%에 그쳤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비난, 대화중단 조치 등이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통일부는 여론을 신중하게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제1회 상생공영포럼(2008.11.13)

한편,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하여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추진하였다.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2004년부터 시행된 쌍방향 소통채널로, 상반기에는 통일부 차관이 민간통일운동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각 실국장이 소관 민간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차관 주재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과의 직접대화도 실시하였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성과를 바탕으로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발전시킨 것이 「상생공영포럼」이다. 「상생공영포럼」은 통일부 장관·차관이 월 1회 문화계, 경제계 등 분야별 대표와 함께 통일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장이다. 2008년 11월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회 상생공영포럼에서는 110여개의 민간단체에서 120여명의 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보수와 진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등 통일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들 상호간에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8년에는 10여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2008년 12월말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총 219개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지원, 대북 교류협력사업추진, 통일교육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시 통일부장관 강연(2008.12.5)

이에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민간통일운동단체 등과 대면 접촉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통일부 장관·차관은 민주평통 직능별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통일교육위원협의회 등 통일문제 관련 주요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화협 10주년 기념행사(2008.9.3), 민통 전국대회(2008.9.26), 민화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2008.10.22~23) 등에 참석,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통일포럼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각종 법정위원회에 민간인 출신 위원을 참석하게 한 것도 통일정책 수립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는 총 20명중 9명의 민간위원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총 18명중 5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통일정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한 자문기구를 통해 원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추진과정에 반영하였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통하여 통일에 관한 여론을 종합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통일정책, 남북회담 등 5개 분야별 「정책자문회의」를 매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일문제에 관해 온라인상 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국민광장’ 자유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질문과 답변’란에서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각 업무 담당자가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통일고객 마일리지 제도」를 원용하고 있다. 「통일고객 마일리지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상 ‘전자공청회’,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08년 현재 4만여 명의 마일리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뉴스레터 발송 등 각종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한해동안 마일리지 우수회원 20여 명에게는 판문점 등 남북관계 주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장 및 중견학자 등 남북관계 전문가 100명으로 「사이버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온라인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이버 정책모니터링단은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관련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틀이 되어 적시성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파워포인트, 동영상, 퀴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대북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파워포인트 자료는 통일부 전직원이 참여한 경진대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되어 대북정책 홍보에 활용되었다.

제2절 통일정책 홍보

정부는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홍보를 추진하였다.

먼저 통일부는 2008년 연두업무보고(2008.3.26)를 통해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연두업무보고(2008.3.26)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추진방식을 실용적·생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러한 관점에서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였다.

언론·방송 관계자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 대변인이 매일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고 장·차관이 TV방송 등에 출연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전

문가, 학자, 이산가족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상생공영정책을 체계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먼저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설명자료인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를 발간(2008.8.1)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문뿐 아니라 영문·중문·일문으로도 발간하여 국제적인 홍보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홍보리플렛 2종을 제작·배포(2008.7.31)하였다. 젊은층의 관심 제고를 위해 통일퀴즈책자(2008.12.26)와 상생공영정책 만화(2008.11.26)를 제작·배포하였고, 홍보동영상 제작(2008.12.26), 지하철 기획광고방송(2008.10.20~12.20), KTX 영상광고(2008.9.8~10.7)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일일통일교사 장면

또한 「순회홍보전담팀」과 「일일통일교사」를 실시하여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다. 순회홍보팀은 16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언론인·전문가·공무원·교직원·유관단체 인사 8,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49회의 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부 직원들이 직접 「일일통일교사」가 되어 인근학교학생과 단체회원 1만 6,299명을 대상으로 총 250회에 걸쳐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을 높이고, 영문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UCC 공모전(2008.6.15~7.22), 상생공영 4행시 공모전(2008.9.19~12.31), 연말특집 통일부 웹진 제작 등을 통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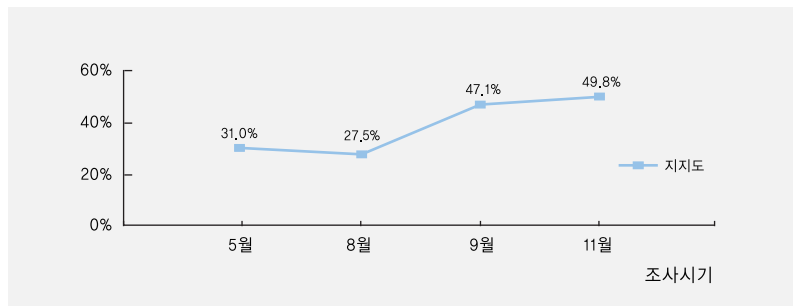
젊은층과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되었다. 8월 말에는 통일부 대표 블로그인 ‘통일미래의 꿈’ (blog.daum.net/mounification)을 개설하였으며 10월 말에는 14명의 대학생들을 「제1기 상생기자단」으로 선발하였다. 통일부 블로그에는 정책자료를 쉽게 재가공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뷰·현장취재·UCC제작·생활밀착소재 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성적·감성적 홍보를 시행하였다.

통일부는 이렇게 상생공영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관련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대북정책으로 인한 남남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이하 「12.1조치」) 등에 대한 대내외 설명자료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계기별로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추진현황』 자료와 『2008년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었나?』 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대내외적인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상생공영정책 지지도 추이

31%(5월, 조선일보-갤럽) ↕ 27.5%(8월, 조선일보-갤럽) ↕ 47.1%(9월, 민주평통-갤럽) ↕ 49.8%(11월, 민주평통-에이스리서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08년 한해 동안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다.

제3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2008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EU 지역에서 총 10회의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국제통일전략대화」는 각국 정부 관료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생

공영정책, 북핵문제 해결, 대북정책과 국제공조, 남북관계 현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및 길림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사회경제연구센터, 일본 시즈오카 현립 대외 카잔카이 연구소, 베를린 자유대 등 해외 유력 연구기관과 공동 주최하였다. 정부는 「국제통일전략대화」 추진시 미국의 국무부·상무부·의회, 중국의 외교부, 일본의 외무성·내각관방 등 유관 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지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정책 설명회도 병행하였다.

통일부를 방문한 외빈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2008년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외빈들로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상원의원, 조지 스왑(George Schwab)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코리아소사이터티 회장, 장춘시엔(張春賢) 중국 후난성 당서기, 가레스 에반스(Gareth Evans) 국제위기기구(ICG) 회장,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호주 외교장관, EU 의회 대표단,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 독일 튀링엔주 총리 일행, 패시 솔로몬(Passy Solomon) 불가리아 국회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해외의 남북관계 전문가를 통일부로 초청, 이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토론하는 「인터내셔널 포럼」을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 맨스필드 재단 소장, 미국 피터슨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도쿄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미아시아문제연구소(NBR)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북

한의 경제 및 식량사정', '북일관계 전망', '중국의 대북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한외교관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총 3회 개최하여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 양국에서 대사를 겸하고 있는 남북 겸임대사들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5월 13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11월 28일에는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본 행사에서는 캐나다·이탈리아·핀란드·뉴질랜드 대사 등 겸임대사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통일안보관을 통해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결성, 주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미국 1회, 일본 3회, 중국 5회 등 총 9회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본 모임은 미국의 경우 KEI, CRS, CSIS 등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로, 일본의 경우 도쿄대, 시즈오카 현립대, 릿쿄대 등의 대학 중심으로, 중국은 북경대, 중앙당교, 개혁개방논단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변국들과의 고위 및 실무급 정책협의를 계속하여 왔다. 통일부 장관은 12월 21일에서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한·중 고위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협의에서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을 면담하고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및 한중간 협력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중 고위정책협의(2008.12.21~24, 중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의 경우 실무급 정책협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논의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현안 발생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대사를 면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의견을 청취, 남북관계 추진에 반영하였다.

이 외에 「통일문제 관련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회차원의 국제협력을 지원하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신낙균 의원과 문국현 의원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독일, 폴란드, 체코를 방문, 의원 대표 및 외교 분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 관련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12월 22일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돕고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18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10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해서는 8개 동포사회 신문과 방송에 「통일칼럼」을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의 「통일소원 음악회」 등 4개 동포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통일문화행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영문판, 일문판, 중문판으로 발간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 배포하는 한편, 한국외교협회에서 발간하는 「외교」지 영문판과 계간지 「Korea & World Affairs」에 대북정책 관련 원고를 게재하는 등 상생공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고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4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북한의 실상과 변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이를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였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간영역의 확장에 따라 민간분야의 북한정보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8년에는 449건의 자료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721건의 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먼저 ‘북한방송 주요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월간 북한동향’을 정기 발간하여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기존의 책자배포 방식을 보완, 전자메일 발송방식을 도입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의 ‘분야별 변화동향’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구조 및 인물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인물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을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였다.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전문기관, 연구자들에게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교류하는 등 쌍방향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통일연구원 등 북한 연구 전문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료를 지원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일반인에게 북한이해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5,000여 권, 정기간행물 9,000여 권, 세미나자료 3,2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500여 건 등 총 9만 2,000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단위 : 건)

종 류	자 료 건 수
단 행 본	15,458
정기간행물	3,331
시청각 자료	4,516
기 타	6,587
계	29,892

「북한자료센터」는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 및 탈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1989년 「북한실상 설명회」가 시작된 이후 2008년 12월말까지 총 469회를 개최하였으며 4만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08년에는 총 28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3,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소장하고 있는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상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인천·창원·제주·부산·광주·청주 통일관 등 6개 지방도시로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1990년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영화 상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400여 회에 걸쳐 총 114만 4,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900회 상영을 통해 13만 5,000여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기록영화와 예술영화 등 비이념적인 북한영상자료 40여 건을 재분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센터」는 「통일교육원」과 더불어 북한 TV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편성표도 제공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자료교환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에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2006년에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그리고 2007년에는 서울대 통일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북한연구소,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대전대 북방연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총 14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의 접근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도 북한 영상자료의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제4회 「세계책나라축제」에 참가하여 북한 자료들을 소개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제1회 「성동도서관문화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백두산 배경으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편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에 대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서반납과 대출관련 ‘문자메세지 서비스(SMS)’를 실시하여 자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2008년 4월에는 소장자료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검색 엔진을 도입하였으며, 12월에는 ‘북한어’와의 차이를 고려, 유사어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관어검색 체계(시소러스)’를 도입하였다.

제5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2월 5일 「통일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2008년 12월 31일에는 「통일교육 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던 사항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 정부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해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와 지도방향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를 반영하고 안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확립하는 것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종전의 10년간의 통일교육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안보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하는 통일이며, 이는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건전한 안보관」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를 유지·보존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튼튼한 안보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균형있는 북한관」이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객관적·균형적으로 알리고 북한이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현실적인 안보 위협의 상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교육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침서』를 3만 2,000여 부 발간·배포하였다.

2. 초청교육

우리정부는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교사 등 교육관계자,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등을 서울시 강북구 소재 통일교육원으로 직접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5,217명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남북한 군사회담과 국가안보」,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과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전망」 등 안보,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 통일환경과 북한이해 분야 전문커리큘럼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초청교육은 사회통일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과정,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 통일미래지도자과정, 방북안내교육 등으로 구별되어 실시되었다.

가. 사회통일교육 과정

사회통일교육 과정은 통일교육의 중간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각 지 역사회 및 직능단체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2008년도에는 총 29개 학급 1,846명을 대상으로 1~3일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통일교육 과정에는 대상별로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을 비롯하여 여성계 인사, 종교계 인사,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지원 업무 종사자 등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사회통일교육 과정 참가자들에게는 직능별 특색을 고려하여 「통일한국과 종교인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NGO 대북지원 사례」, 「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남북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통일교육발전토론회」, 「남북경협 사례와 발전방향」 등 총 24개의 맞춤형 교과목이 제공되었다.

사회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NGO 대북지원 사례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구서독 정부의 동독 이탈주민 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례
남북경협 사례와 발전방향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과 봉사
남북 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과제
대북사업자가 본 북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대일 무역역조 심각성과 정부의 노력	영화를 통한 북한사회 이해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통일교육발전토론회
북한 경제구조와 개혁개방 전망	통일한국과 종교인의 역할
북한 식량난과 대북지원	한민족 갈등관리와 국민통합
북한여성 생활방식과 여성교류	한민족 역사와 통일국가 발전전략

나. 학교통일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과정은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사, 미래의 교사인 일부 대학생 등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총 25개반 1,452명에게 3~10일간 교육이 실시되었다. 학교통일교육 참가자들은 청소년들

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과 북한 핵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과에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업사례와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되 교사들의 통일준비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교육제도, 남북교육통합,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었다. 특히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정세,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 통일환경과 북한이해 관련 전문커리큘럼을 보강하였다.

교육계의 여론 주도층인 교장·교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 맞춤형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스승의 날 특별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통일 및 북한학계의 여론 주도층인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북핵문제,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대학교수통일문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전달자인 도덕·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단기과정(15시간 1학점)을, 하계 방학기간 중에는 장기과정(60시간 4학점)을 운영하였다. 특히 장기반의 경우에는 대북정책, 통일환경 등 기본과목 이외에 학교통일교육분야 2과목, 북한이해분야 5과목, 통일준비분야 2과목, 세미나 6회, 사례청취 4회, 특강 4회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였다.

학교통일교육 과정에서 교육대상별로 실시된 특색 있는 강좌들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 | | |
|----------------------|-------------------------------|
| · 각급학교 통일교육 사례 | · 유아를 위한 통일교육의 기법과 사례 |
| · 경제난 이후 북한교사의 현실 | ·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각급학교 통일교육 기법 |
| · 남북교육교류 및 통합의 과제 | · 학교통일교육의 현주소와 실천방안 (세미나) |
| · 도덕·사회교과에서의 통일교육 | · 북한의 각급학교 교육제도 및 현황 |
| · 북한의 각급학교 교육제도 및 현황 | · 북한이탈 학생 적응실태와 과제 |

다.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공무원통일교육 과정은 총 30개 학급 1,761명을 대상으로 3~10일간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4~7급 직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자, 보안경찰,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신규임용 수습사무관 등이 공무원통일교육 과정에 참가하였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및 장병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장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등도 실시되었다.

임용예정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수습중인 입법고시 합격생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수습중인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의 통일법학회원들에게는 통일부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및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남북교

류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남북협상전문가반을 신설하였다. 남북대화의 특징과 본질, 남북간 협상 주요 의제·쟁점, 회담운영 프로세스, 대표단 행동요령 등 회담 관련 실무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자회담 시뮬레이션 및 남북간 모의회담을 실시하였다.

공무원통일교육 분야에서 교육대상별로 실시된 특색 있는 강좌들은 아래 표와 같다.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북한공무원의 선정방식과 행정원리	신세대 장병 통일교육 사례발표
북한의 경찰제도와 실태	자치단체 교류협력 사례와 과제
북한의 행정체제	통일부 소관 법제업무 안내

라.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창의적 리더십, 상황변화 대처능력, 통합·조정 능력과 정책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제3기 교육생을 양성하였는데, 교육은 2008년 2월부터 12월 까지 10개월간 실시되었다.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정보화 교육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토론회

제3기 교육생은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4개 헌법기관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국·과장급,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공기업 간부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내용은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 등 분야별 전문 강의, 정책세미나, 현안문제토론회 등 참여학습, 남북교류협력현장, 안보현장 등 현장체험 학습, 구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해외사례연구, 개인별 정책과제연구, 교양 강의,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하게 편성·운영되었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프로그램

구 분	세부 내용
기본교과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참여학습	정책세미나, 현안문제토론회, 독서토론, 협상시뮬레이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훈련
현장체험	남북교류협력현장, 안보현장, 해외사례연구
정책과제연구	연구계획 수립, 개인연구, 정책과제연구 지도, 발표·평가
교양 및 자기개발	소양교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체육활동, 사회봉사활동

마. 방북안내교육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예정자들을 위해 방북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북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매주 2회(화·목) 실시하는 정례교육, 방북예정자 요청시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매일 출경전 실시하는 영상교육, 그리고 2009년부터 시행되는 사이버방북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2008년도에 방북안내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2만 4,685명으로서, 1만 9,005명이 정례교육을, 1,684명이 특별교육을, 3,996명이 영상교육을 받았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방북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인천·경남·전남 등의 지역을 방문하여 방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8년도에는 통일교육원 정례교육에 참석하는 방북예정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한 관광객 신변안전 강화를 위해 북한지역 체류시 언행 등 유의사항 중심으로 영상물을 제작·보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 및 학교 통일교육, 공무원 통일교육, 방북안내교육 등 초청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통일부는 2008년도에 교수역량 강화 및 교육생의 편의 보장 등에 주력하였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실시해오던 교수성과 평가제도를 더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교수단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문제·북한 이해·통일환경·인도적 현안·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

문가들을 객원교수로 위촉하였다.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mail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과정을 안내하였다.

3.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uniedu.go.kr>)는 2000년 10월 13일에 처음 개통되었으며, 이듬해 3월 통일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이버통일교육팀(2004. 1 '사이버교육과'로 변경)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사이버 통일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통일교육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2008년 통일교육과정명 개편」에 따라 홈페이지 명칭을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화면을 재구성하는 등 2009년 1월 30일부터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가. 교원·공무원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사이버통일교육 직무연수는 2003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으로 「원격교육연수원」 기관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기과정 30시간에 2학점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2월에는 장기과정 60시간 4학점을 인가 받았다.

2008년 사이버통일교육 직무연수는 전국 총 16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장기과정 6기, 단기과정 7기 등 총 2,000명 교육계획에 3,042명이 이수를 하여 목표대비 150%를 달성하였다. 단기과정은 30시간 2학점으로 총 1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과정은 60시간 4학점으로 총 1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과정별 교육과목중 1개 과목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내용 및 수준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장기과정은 온라인 과정과 병행하여 집합교육 및 출석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석시험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이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집합교육시에는 북한의 실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및 각종 특강(상생공영정책의 이해 등)을 실시하였다.



교원사이버 통일교육 화면(http://lms.uniedu.go.kr)

온라인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 수료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분단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였다. 2008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판문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남북출입사무소, 전방부대 등을 방문하였다. 2009년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현장체험학습 장소 또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등 북한현지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대상 사이버통일교육은 2007년 9월에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대상 원격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정받아, 2007년도에 시범실시를 한 후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기수씩 총 9기를 운영하였다. 수강과목은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의 사회문화」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65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사이버통일교육을 이수하는 공무원에 대해 상시 학습 11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사이버통일교육 화면(http://cyber.uniedu.go.kr)

나. 사이버 방북안내교육

그동안 방북예정자들은 3~4시간 방북교육을 받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음에 따라, 2008년 5월 23일 이명박 정부의 「국민생활불편해소 100개 과제」에 '방북교육의 사이버방북교육으로의 전환'이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방북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방북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2009년도 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이버통일교육용 게임 '한라에서 백두까지' (<http://www.uniedu.go.kr>)



사이버 방북안내교육 화면(<http://cvg.uniedu.go.kr>)

다.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일의를 함양하고자 「사이버통일교육용 게임」을 개발하여 2008년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4일간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2,031명이 참여하여 16명이 입상하였다.

이 게임은 3,000개의 DVD로 제작되어 이벤트에 참여한 초등학교 및 사이버통일교육 성적우수 교원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고, 전국 각 초등학교에 1일 통일교사로 가는 통일부직원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통일교육 과목의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외부강사가 참여하여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과목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상생공영 3D 애니메이션」, 「떡거리를 통해 본 북한현실」, 「북한문화재 이해」, 「독일통일의 교훈」, 「퀴즈게임」 등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북한의 대남전략」도 신설되었다. 개편된 내용은 2009년 학습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인터넷 잡지 성격의 통일교육 웹진 「유니진」을 2005년 1월부터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2008년 발행된 웹진(제36호부터 제47호까지)을 묶어 책자로 발간하였다.

2008년도 사이버통일교육 자료

자 료 명	제작연월	비 고
'사이버통일교육'으로의 초대	2008.7	책자
'한라'에서 '백두'까지(초등학생용 게임)	2008.12	DVD
2008 통일교육 웹진 「유니진」	2008.12	웹진, 책자

4. 통일교육 지원

통일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통일교육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과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청소년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18개 초·중·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였다. 2008년 11월 25일에는 시범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통일교육 교사들의 우수한 교육 사례와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자들에게 통일부 장관상 및 통일교육원장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전국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서울 및 전국 각 시·도 지역의 학교에 골고루 통일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8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발표회(2008.11.25)

청소년 세대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6년 이래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 총 5,830개 학교에서 100만 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144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청소년 통일체험 학습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학 사회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54명이 47편의 논문을 응모하였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의 입선작을 선정·시상하였다. 수상 작품집은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전국의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 개최된 제3회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에서는 4개 대학, 70여명의 대학생들이 ‘우리시대를 위한 새로운 통일담론의 제시’, ‘남남갈등 분석과 해결방안’,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대북정책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2008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하나 되는 우리, 함께 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학생 및 시민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통일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4회를 맞는 「통일문화 페스티벌」은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북한관련 문화행사와 통일교육의 접목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북한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한 통일문화의 마당이다. 행사 기간중 통일퀴즈왕 선발, 청소년 통일 UCC, 상생공영 4행시 짓기, 통일깎러리, 통일놀이마당, 북한음식체험전, 북한영화 상영, 남북전래동화 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제4회 통일문화페스티벌(2008.10.30~31)

지역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일교육 사례·기법을 공유하며 학교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이라는 대주제 하에 총 5회에 걸쳐 대구, 부산, 인천, 수원, 대전에서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지역 교육청 인사 및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 등 총 2,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통일교육원 교수가 남북관계 현안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나. 사회통일교육 지원

1987년 제정된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여론수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1,148명의 통일교육위원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 연찬교육, 통일대화의 광장(10.15~16, 목포), 구사회주의권 체험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북정책 동영상 및 책자, 통일신문 등 각종 자료 제공, 지역협의회 주관 세미나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는 2008년말 현재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평화문제연구소, 자유총연맹, 경실련통일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95개의 다양한 통일교육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및 각종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통일관련 교육 기회, 시설 및 정보 등 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사회에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일교육 관련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5개),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등 단체(5개)를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주체로 지정하였으며, 한 해 동안 총 217회(정기 시민통일강좌, 통일문화 축제 등 70개 사업, 4만 6,614명 교육)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부터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통일교육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위원, 통일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통일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08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소재지)	운영 주체	통일교육 실적
영남(3)	부산(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6개 사업 (총 24회, 9,650명 참석)
	경남(진주)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7개 사업 (총 22회, 3,205명 참석)
	대구·경북(대구)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8개 사업 (총 44회, 7,419명 참석)
충청(2)	대전(대전)	(사)대전통일교육협의회	7개사업 (총 21회, 3,088명 참석)
	충남·충북(천안)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8개 사업 (총 16회, 4,280명 참석)
호남(2)	광주·전남(목포)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7개 사업 (총 9 회, 2,347명 참석)
	전북(전주)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통일교육센터	7개 사업 (총 21 회, 3,870명 참석)
강원(2)	강원 동부(속초)	(재)코리아하나재단 실악수련원	7개 사업 (총 24회, 6,560명 참석)
	강원 서부(춘천)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4개 사업 (총 23회, 1,962명 참석)
제주(1)	제주(제주)	제주대 평화연구소	9개 사업 (총 12회, 4,233명 참석)
합 계	10개		70개 사업 (총 216회, 46,614명 참석)

전국 13개 지역의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통일외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청소년층 및 실향민 등을 중심으로 약 300만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으며, 서울지역에는 서울통일관이 새로 개관되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통일교육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자료, 북한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국 통일관 운영 현황

지역	통일관	주소	개관일	운영주체	휴관일
강원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1988.6.16	(주)고성 통일전망대	연중무휴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 720	1996.8.14	양구군청	월요일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 4리 20-1	1990.12.15	철원군청	화요일
수도권	인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자유회관내)	19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월요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내)	1992.9.8	(주)동화진흥	연중무휴
	서울	서울 구로구 공동 35번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내	2008.10.29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토, 일
충청	대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 과학 공원내)	2001.8.11	(지방공사)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월요일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413 (청주랜드내)	1993.2.23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월요일
	충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2007.4.5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월요일
호남	광주	광주 서구 화정2동 316-11 (화정근린공원내)	1989.3.10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월요일
영남	부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19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연중무휴
	경남	경남 창원시 웅지동 485 (자유회관내)	19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일요일
제주	제주	제주 제주시 일도 2동 968-2(자유회관내)	19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일요일

5.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008년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는 통일교육의 3대 목표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학교·사회 통일교육 기관, 초청 교육생, 자료 요청자 등에게 총 75,688부를 배포하였다. 특히 통일교육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균형적 시각에서 재편하여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8년판 『통일문제이해』는 정부의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통일환경, 남북관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이 제기된 배경과 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북한이해』는 북한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주민생활 등 분야별 실상을 사실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최근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추가하고 사진과 도표 등 시각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들 기본교재는 정부기관, 각급 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1,509개 기관에 보급·활용되었고, 40여 개 대학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한편, 참고자료로 통일정책·남북관계·북한실상 관련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2007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에 따라 2008년에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

에 따라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합의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바,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표준강의안(PPT)을 일반 성인, 해외동포, 청소년 대상으로 각각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활동에 활용하였으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영상교육자료(DVD)를 제작하여 민주평통, 사회 통일교육 기관 등에 보급하였다.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자료는 문헌·영상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2003년부터 통일·북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북한의 체육 실태』, 『북한의 문화재 실태』 등 2종의 ‘주제강좌’를 발간하여 대학 관련학과, 연구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북한 영화·드라마 화면,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라는 북한바로알기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영상자료는 계획과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북한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와 학교 수업 파행 등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에 대한 안내교육 자료인 『북한방문 길라잡이』는 2차에 걸쳐 개정 발간되었다. 『북한방문 길라잡이』 1차 개정판은 방북

준비 및 방북 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요약본을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2차 개정판은 수록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자료를 최신화하고 기존 내용을 체계화·구체화하였으며, 북한 지역별 체류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가독성과 휴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책자의 판형과 디자인도 개편하여 이를 방북 예정자와 유관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방북 안내 영상자료 또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방북 안내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광객용 방북교육 영상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남북출입사무소, 현대아산 등 유관기관에 보급하였다.

2008년에는 재외동포와 장애인 청소년 등 통일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도 시선을 돌려, 이들 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를 제작하였다. 재외동포 청소년용 교육자료로 2007년 제작한 학교통일교육용 애니메이션 『가자미의 눈물』을 영어판과 일어판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으며, 장애인용 교육자료로는 2007년 제작한 청소년용 통일교육 애니메이션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자막·수화 삽입본을 제작하여 전국 특수학교 및 장애인 시설 등에 보급하였다.

한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 및 전년도에 제작한 만화·애니메이션 등 교육자료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 통일교육원 제작 자료

자 료 명	제작연월	비 고
통일문제이해	2008.7	책자
북한이해	2008.4	책자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8.4	1차 개정판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8.12	2차 개정판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2008.12	책자
북한의 체육 실태	2008.7	주제강좌 21호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12	주제강좌 22호
통일교육소식 7호	2008.7	책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008.11	DVD
북한 관광을 위한 방북안내	2008.11	CD/DVD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2008.11	DVD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2008.11	DVD
가자미의 눈물 A Flatfish's Tears	2008.12	DVD
가자미의 눈물 カレイの涙	2008.12	DVD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자막·수화 삽입	2008.6	DVD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8.5	PPT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일반용)	2008.9	PPT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해외용)	2008.12	PPT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청소년용)	2008.12	PPT

부 록

2008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08년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08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일 시	추진 내용
1.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22~27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후속조치 협의 및 기술지원을 위해 7명 방북
1.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4	2008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2.5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체결 및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판문점) 금강산 관광 활성화 관련 제2차 남북 실무접촉(개성) 「금강산 관리위원회」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2.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19~23	남북당국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2.22	남·북·중 3자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 우선 제공분 출항
2.25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지 표명
2.26~28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동평양대극장)
3.16~24	2008아시아 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3.24	북한, 개성공단 남한 당국 인원 철수 요구

일 시	추진 내용
3.25~26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 파견
3.26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3.27	북한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지적, 경험사무소 정상화 촉구
3.25~26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 파견
3.26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3.27	북한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지적, 경험사무소 정상화 촉구
3.27~28	6차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WG 남북실무접촉(판문점)
3.29	남북장성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 통지문, 남북대화 및 접촉 중단 선언, 당국인원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 통보
3.31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관련 북한에 제공기로 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마지막 항차분(26번째) 출항
4.1	북한 노동신문,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정부 본격 비난 개시
4.2	남북장성급회담 우리측 단장 명의 통지문(답신), 유감 표명,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
4.8	북한의 열차 운행사무소 직원 출입제한 조치로 운행사무소 직원 탑승없이 화물열차 운행
4.10~11	제3차 남·북·중 3자 협의 2단계 회의(베이징)
4.10	북한, 금강산 공사현장 남한 조달청 직원 추방
4.17	대통령, 워싱턴포스트 회견에서 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안
4.22	북핵 신고·검증 방안 실무조율 관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방북

일 시	추진 내용
4.27~28	북핵 관련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분(경량레일 5,000톤 및 강판용 2,689톤) 대북 수송
4.29	통일부 장관, 국회 통외통위에서 6.15 및 10.4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 검토를 위해 남북간 협의를 제안
4.24~2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제주) 참석자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5.8~10	북핵 신고 문제 실무협의 관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육로 이용 방북
5.12	옥수수 5만톤 대북지원 제안
5.13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석
5.13~20	중앙일보 기획취재단 18명 「제11차 평양 불철 국제상품전시회」 참가
5.13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석
5.23~6.15	남측위,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협약차 개성 방북
5.29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금강산)
5.29~5.30	전교조 정진화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금강산)
5.30~6.15	학술본부 이서행 상임공동위원장 등 5명, 「2008년도 협력사업」 협의차 방북(개성)
6.5	경제·에너지 WG 수석대표회의 대비 남북 사전 준비접촉(판문점)
6.6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대화가 필요함을 표명
6.10	6자회담 경제-에너지 WG, 5자 공여국 회의 개최
6.10~11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 신고·불능화 관련 협의차 육로 방북
6.11	경제·에너지 WG 수석대표회의(판문점)

일 시	추진 내용
6.15~16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북한방문 경기(평양)
6.19~23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참가 북한선수단(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방남
6.25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2차 6월분, 철강류 2,534톤) 남포 수송
6.26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미국, 테러지원국 해제 의회 통보 등 절차 개시
6.27	북한, 영변 냉각탑 폭파
6.26~28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6.30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옥수수 지원을 공개적으로 제안
7.9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김숙(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외무성부상) 회동(베이징)
7.10~12	6자 수석대표(김숙,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사이키 아키다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회동(베이징)
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에서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대통령, 국회 개원 시정연설 통해 남북대화 제의 및 6.15, 10.4선언 이행 시사 통일부 대변인 언론 브리핑, 유감표명, 진상규명 조치 및 향후 대책 발표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완료 진상규명 촉구 및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내용의 대북 통지문 전달(북한 접수 거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유감 표명, 남측의 사과 및 재방방지 대책 요구
7.12~15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조사차 방북(금강산)

일시	추진내용
7.13	통일부 대변인 성명, 진상조사단 수용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7.15	조사단 현지 파견 촉구 대북 전통문 전달(북한 수령 거부)
7.16	정부합동조사단·국립과학수사연구소, 故 박왕자씨 부검결과 발표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7월분, 환강 1,441톤) 제공(인천항→남포항)
7.18	총리실·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점검 평가단 구성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개성관광 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해 방북
7.23	6차회담 출범 이후 최초로 참가국 외무장관들(비공식) 회동, 6개항 합의 도출(싱가포르)
7.24	남북 노동자 3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업 총동맹) 실무접촉(개성)
7.25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경과 브리핑
7.28~31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경쟁입찰 품목 인도 목적 방북(단동→남포)
8.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 결과 발표
8.3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부당성 지적, 진상조사 호응 촉구
8.9	북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통문, 8.10부터 금강산지구 남측인원 추방 통보
8.12	금강산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남북 모래운반선 동이1호(658),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한어선과 충돌
8.14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1호, 남측 귀항, * 北, 핵 불능화 중단 선언
8.15	대통령, 8.15 광복절 및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전면적 대화 촉구
8.26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불능화 중단 성명 발표

일시	추진내용
9.11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국제입찰분 제공 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 (중유 환산 약 1.6 만톤 상당 철강류 제공)
9.22	대통령, 민주평통 지역회의 개최사에서 6.15 및 10.4선언을 포함,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간 전면적 대화가 필요함을 표명
9.23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협의 관련 6.15 남북위원장 개성 접촉
9.23~27	6.15 남측위 지역본부 50명, 지역교류 협의차 평양 방북
9.30	MBC 관계자, 북한 명산 취재 협의(개성)
10.1	힐 차관보 방북(판문점 통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면담 - 북핵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협의
10.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우리측 : 대남비난 중지, 남북대화 제안,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대책 요구, 개성지구 출입·통행 해결 촉구 △북한측 : 대남전단 살포 지속시 군사부계선 통행제한 등 경고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50여명,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참가(평양)
10.11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10.14	북한, 핵불능화 조치 재개
10.16	북한 노동신문 논평원 '남북관계' 전면치단 경고
10.27	북한, 남북 군사실무접촉시 대북 뼈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등에 악영향" 경고
10.28	북한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뼈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11.6	북한 군 조사단, 개성공단 현황 점검
11.11	대통령, 조선일보·마이니치신문·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일 시	추진 내용
11.1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전화통지문, 12.1부터 육로 통행 제한·차단 경고 북한, 핵 검증 관련 시료채취 합의 부인 통일부 대변인 논평, 6.15 및 10.4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 용의 표명
11.1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 전화통지문, 개성공단 사업 등 지속·유지 발전 입장 전달,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장비 제공 협의 제의
11.14	개성공단 기반시설 개선 및 탁아소 건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등 남북협력기금 104억원 집행 의결
11.18	금강산 관광 10주년 연탄전달 등 대북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문 허용
11.19	관계부처회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결정
11.21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11.24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전화통지문/경협사무소/개성공단관리위 채널, 12.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경협사무소 폐쇄 시행통보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표명,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됨을 지적, 조치 철회 촉구, 남북대화 촉구
11.26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 남한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
11.27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화통지문, 12.1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시간 축소 통보 통일부 장관, 국회 「개성공단 상품 전시 및 판매전」 개막식 축사에서 북한이 금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대화를 제의
11.28	개성관광·남북열차운행 잠정 중지, 경협사무소 철수
11.30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지문, 상시 체류인원 880명으로 제한

일 시	추진 내용
12.1	북한, 「12.1 조치」 실행 ※12.1조치 :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 열차 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 조치(개성공단 남측 체류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표명, 남북합의 위반 지적, 철회 촉구, 당국간 대화 제의
12.2	통일부 장관,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축사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
12.3	개성공단 관계자 436명 철수
12.5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6.15 및 10.4선언을 포함 남북간 대화 의지 표명

2008년 남북관계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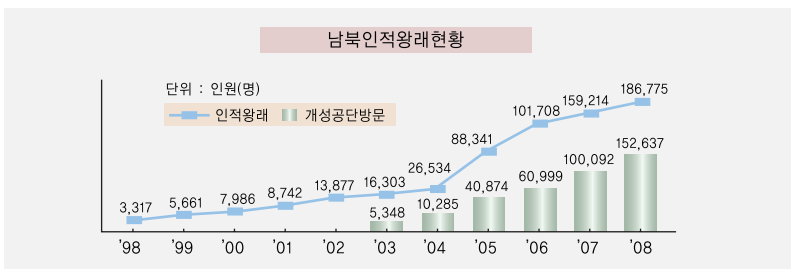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남→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613,949
북→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7,489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621,438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 관광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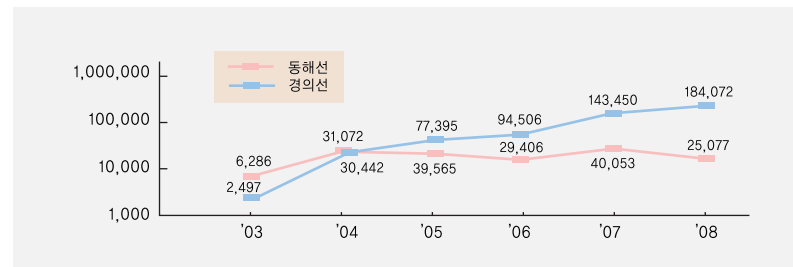
(2008.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112,033

③ 남북 차량왕래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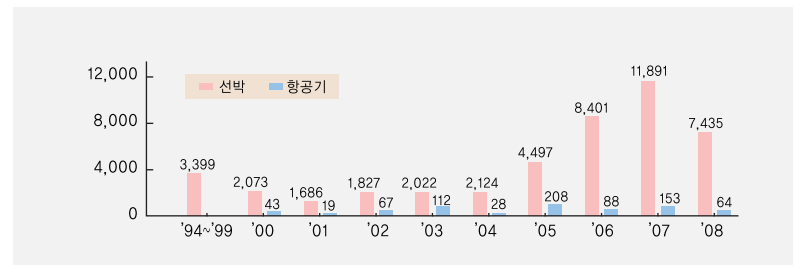
구분	'03	'04	'05	'06	'07	'08	계	
차량 (운행회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4,072	532,362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171,459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9,149	703,821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회(편도))

구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45,355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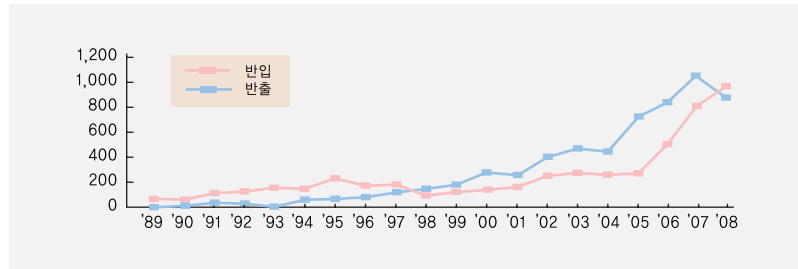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①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5,170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5,845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1,015



② 교역업체 및 품목수 현황

· 교역 업체 및 품목

(2008.12.31 기준, 단위 : 개)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업체	56	77	121	136	236	319	356	419	516	536	506	432	481	462	523	477	425	760
품목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32	588	634	775	757	852	859

· 위탁가공 업체 및 품목

(2008.12.31 기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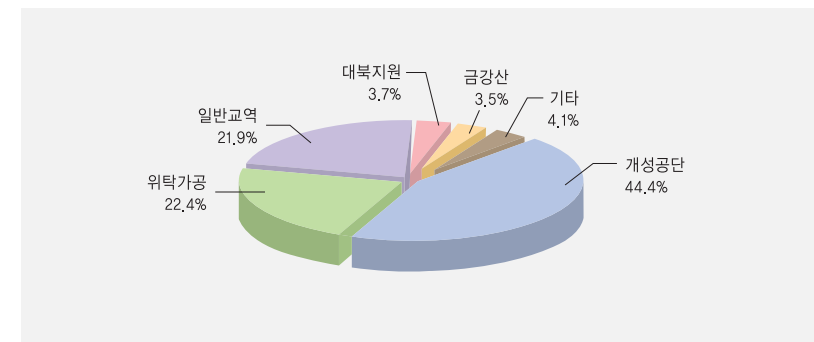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업체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123	89	164
품목	9	35	63	83	118	108	132	170	202	236	255	180	179	197	199	165	203

③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
반입	일반교역 · 위탁가공	258	320	441	645	624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경공업협력 · 기타)	-	20	77	120	308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	-	1	-	-
	반입 합계	258	340	520	765	932
반출	일반교역 · 위탁가공	89	100	116	145	184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경공업협력 · 기타)	89	250	294	520	596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108
	반출 합계	439	715	830	1,032	888

2008년도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①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개수/만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계
가동기업수	18	30	65	93	206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52,484

②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북한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남한 근로자	490	791	785	1,055
합계	8,111	11,980	23,323	39,986

③ 개성공단 방문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명/대)

구분	2005	2006	2007	2008	계
방문인원	40,874	60,999	100,092	152,637	354,602
방문차량	19,413	29,807	42,399	85,626	177,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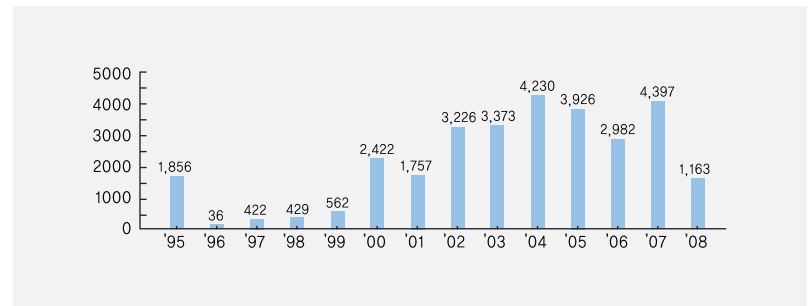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북지원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정부 지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14,168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2,896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7,885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30,781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차원포함)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건/(명))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50	3,791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28	11,321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54	33	1,672	
												(383)	(471)	(592)	(662)	(465)	(256)	(86)	(162)	(92)		(3,169)
	방북상봉										1	5	4	5	5	3	1	1	4	1	3	33
										(2)	(18)	(9)	(22)	(24)	(15)	(5)	(5)	(19)	(5)	(5)		(129)
공 공 차 원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1,196	-	6,733	
		(157)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9,121)			(48,495)
	서신교환											39	623	9	8	-	-	-	-	-	679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	-	-	-	-	-	-	331	
	(61)										(1,720)	(899)									(2,700)	
방북상봉	35										202	100	398	598	400	397	594	388	-	3,112		
	(76)										(674)	(343)	(1,724)	(2,691)	(1,926)	(1,811)	(2,683)	(1,741)			(13,669)	
회상상봉																199	80	278	-	557		
																(1,323)	(553)	(1,872)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 : 127,343명 등록(사망 38,926명/생존 88,4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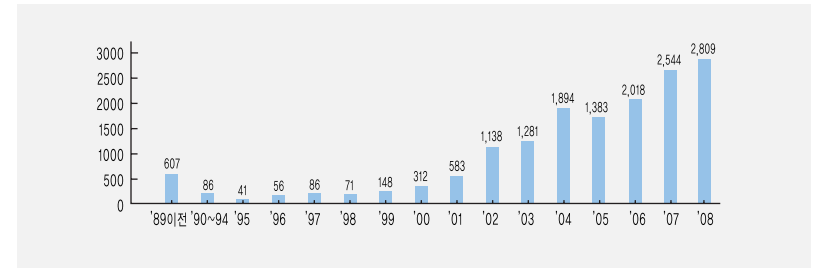
③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89 이전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남성	562	115	43	56	53	90	179	294	506	469	626	423	509	570	612	5,107
여성	45	12	13	30	18	58	133	289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8,991
합계	607	127	56	86	71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5,057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북한 이탈주민 입국 추이



5. 남북회담 개최 현황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회)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정치	156	4	10			7	4	8	18	2	4	5	2	10	5	13		248
군사	0								4	2	9	6	5	3	4	11	2	46
경제	5								3	3	14	17	13	11	8	22	3	99
인도	111			3		4	1		2	1	3	7	2	4	3	3		144
사회 문화	34										2	1	1	6	3	6	1	54
합계	306	4	10	3	0	11	5	8	27	8	32	36	23	34	23	55	6	591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2008.12.31 기준, 단위 : 건)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의서 건수	0	2	1	0	3	3	1	18	4	23	31	21	23	10	39	5

2009 통일백서

발행일_ 2009년 6월 26일

발행처_ 통일부

주 소_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별관

전 화_ 02-2100-5741 팩스 02-2100-5749

편집·인쇄_ 일홍인쇄 02-2275-8310
